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 23-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3. 12.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변 양 규	연 구 위 원
김 창 배	연 구 위 원
김 윤 진	연 구 위 원
김 선 우	연 구 위 원

〈 차례 〉

요 약	V
제I장 최근 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6
3. 물가	10
4. 고용	12
5. 금리와 환율	14
제II장 국내경제전망	17
1. 대외 여건	19
2. 2014년 국내경제전망	43
제III장 이슈분석: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55
1. 검토 배경	57
2. 노동시장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59
3. 정책적 시사점	72
부 록	75

〈 표 차례 〉

〈표 I-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5
〈표 I-3〉 경상수지 추이	10
〈표 I-4〉 실업률 및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증감	13
〈표 II-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 전망(IMF)	20
〈표 II-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3
〈표 II-3〉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6
〈표 II-4〉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8
〈표 II-5〉 3중전회 7대 과제	30
〈표 II-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31
〈표 II-7〉 세계 석유 수급 전망	34
〈표 II-8〉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37
〈표 II-9〉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41
〈표 II-10〉 전망의 주요 전제	42
〈표 II-11〉 2013~2014년 국내경제전망	53
〈표 III-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표 III-2〉 100인 이상 기업의 부담증가 추정액	66
〈표 III-3〉 통상임금소송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고용감소 효과	67

〈그림 차례〉

〈그림 I-1〉 실질 GDP증가율 추이	3
〈그림 I-2〉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6
〈그림 I-3〉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6
〈그림 I-4〉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7
〈그림 I-5〉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8
〈그림 I-6〉 용도별 수입증가율	8
〈그림 I-7〉 수출입 및 무역수지	9
〈그림 I-8〉 월평균 경상수지 추이	10
〈그림 I-9〉 물가 추이	11
〈그림 I-10〉 아파트매매가격	12
〈그림 I-11〉 아파트전세가격	12
〈그림 I-12〉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14
〈그림 I-13〉 원/달러 환율 추이	15
〈그림 I-14〉 외국인 주식 순매수	15
〈그림 II-1〉 미국의 분기별 실질성장률과 지출단위별 성장기여도	21
〈그림 II-2〉 미국 주택시장	22
〈그림 II-3〉 미국 고용시장	22
〈그림 II-4〉 미국의 민간소비 추이	22
〈그림 II-5〉 미국의 도산 기업 수	22
〈그림 II-6〉 유럽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24
〈그림 II-7〉 경기체감지수와 산업생산 추이	24
〈그림 II-8〉 실업률	24
〈그림 II-9〉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추이	25
〈그림 II-10〉 일본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26
〈그림 II-11〉 일본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	27
〈그림 II-12〉 일본의 생산과 소매판매	27
〈그림 II-13〉 일본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28
〈그림 II-14〉 일본의 현재경기지수	28
〈그림 II-15〉 중국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29
〈그림 II-16〉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29
〈그림 II-17〉 중국의 무역수지	29
〈그림 II-18〉 국제유가 추이	32

〈그림 II-19〉 2013년과 2014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	33
〈그림 II-20〉 세계 석유재고 추이	34
〈그림 II-21〉 NYMEX-WTI 선물옵션 투기 포지션	36
〈그림 II-22〉 금	38
〈그림 II-23〉 구리	38
〈그림 II-24〉 알루미늄	39
〈그림 II-25〉 니켈	39
〈그림 II-26〉 옥수수	39
〈그림 II-27〉 소맥	39
〈그림 II-28〉 달러 인덱스	41
〈그림 II-29〉 엔/달러 환율	41
〈그림 II-30〉 달러/유로 환율	42
〈그림 II-31〉 위안/달러 환율	42
〈그림 II-32〉 반기별 성장흐름	44
〈그림 II-33〉 내수 및 수출 성장기여도	44
〈그림 II-34〉 소비심리지수(CSI)	45
〈그림 II-35〉 가계 평균소비성향	45
〈그림 II-36〉 설비투자압력	47
〈그림 II-37〉 BSI(업황 및 설비투자)	47
〈그림 II-38〉 전세가/매매가 비율	48
〈그림 II-39〉 건설투자와 건설수주의 시차	48
〈그림 II-40〉 서비스수지 추이	50
〈그림 II-41〉 서비스산업 1인당 노동생산성	50
〈그림 II-42〉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51
〈그림 II-43〉 GDP갭률	51
〈그림 III-1〉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와 임금피크제	62
〈그림 III-2〉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선의 효과	63

I. 최근 경제동향

- 성장률, 2013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1.1%, 전년동기 대비 3.3% 기록
 - 2분기 연속 성장률 호조로 저성장 장기화의 우려는 다소 완화
 -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이어진 0%대의 저성장에서 탈출
 - 원계열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3분기(3.6%) 이후 7분기 만에 반등
 - 2, 3분기 성장률 반등은 정부 재정책대의 영향에 주로 기인
 -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재정의존 부문이 성장 주도
 - 반면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부문 관련 기여도는 하락
- 수출(통관기준)은 1분기 0.4%, 2분기 0.7%, 3분기 2.8%에 이어 10~11월 3.7%로 호조세 확대
 - 10~11월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21.2억 달러 기록
 - 지역별로는 對일본 수출이 부진한 반면 對미, 對EU 수출은 호조 지속
- 수입(통관기준)은 1분기 -3.0%, 2분기 -2.8%, 3분기 0.2% 증가에서 10~11월 2.3% 증가로 상승폭 확대
 - 10~11월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18.5억 달러 기록
 - 용도별로는 원자재 수입이 연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가운데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
- 무역수지, 10~11월중 96.9억 달러 흑자(전년 81.3억 달러 대비 15.6% 증가)
 -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의 증가율이 수입의 증가율을 상회

- 경상수지 흑자, 올 1~10월중 누적 규모 582.6억 달러(21개월 연속 흑자)
 - 전년동기 대비(2012년 1~10월중 382억 달러) 201억 달러 확대
 - 월평균 경상수지 흑자규모 확대 추세 지속
 - 월평균 흑자: 49.6억 달러(1~6월중 월평균) → 71.2억 달러(7~10월중 월평균)
- 소비자물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저물가 지속
 - 작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1%대, 올 9월부터는 0%대 증가율 지속
 -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의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
- 고용, 고령취업자 중심의 양적 확대 지속
 - 전체 취업자 증감(천 명): 257(2013. 1분기) → 324(2분기) → 421(3분기) → 476(10월) → 588(11월)
 - 50세 이상(천 명): 377(2013. 1분기) → 410(2분기) → 466(3분기) → 479(10월) → 511(11월)
 - 실업률, 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11월중 2.7%로 하락
- 금리, 11월 이후 美 양적완화 축소 임박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추세
 - 미국 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했다는 경계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임
 - 회사채(3년만기, AA-): 7월(3.38%) → 10월(3.25%) → 12.1~20일(3.39%)
- 원/달러 환율은 6월말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수 확대와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외국인 주식 순매수 금액: -10.0조 원(1~6월) → 15.1조 원(7~11월)

- 경상수지: 49.6억 달러(1~6월중 월평균) → 71.3억 달러(7~10월중 월평균)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 2014년 세계 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 (미국) 고용 지표와 민간 부문의 소비세 호조로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행이 결정되고 내년 예산안도 합의됨에 따라 내년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세를 확대할 전망
 - (유로지역)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민간부문 경기체감지수의 상승, 무역수지 확대와 양적완화 유지의 정책적 의지에 힘입어 내년 1.0% 플러스 성장할 전망
 - (일본) 내수 생산과 판매, 인플레이션 및 현재경기체감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
 - (중국)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 변화 등 정책적인 큰 그림의 개혁으로 인해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완만히 둔화할 전망
- (국제유가) 내년 非OECD의 수요 증가로 올해보다 국제 석유 수요가 소폭 확대되겠으나 非OPEC 생산 증가가 이를 능가하며 유가는 올해보다 다소 낮아진 상태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요측면) 중국(+4.1%), 인도(+2.7%) 등의 非OECD 수요가 세계 석유 수요를 견인

할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인 달러 강세로 석유의 투기적 수요는 감소할 전망

- (공급측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非OPEC의 생산 증가와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석유 재고 증가 등으로 공급량 회복 전망
 - 단, 내년 5월 2차 이란 핵 협상, 리비아·시리아·이집트 등의 정정불안이 리스크 요인

■ (주요국 환율) 내년 점진적인 달러화 강세 속에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유로화, 엔화 약세 폭이 조정될 전망

- (미달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고용시장과 민간소비의 회복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내년 시행됨에 따라 달러화는 박스권 등락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강세 기조를 보일 전망

- (유로) 내년 비로소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인 리스크와 미국과의 회복 폭 차이로 유로화는 점진적 약세를 보일 전망

- (일본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 회복력 약화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지속될 것이나 내년 엔화는 올해보다는 축소된 낙폭으로 엔저 추세를 이어갈 전망

- (중국위안) 국제사회의 절상 압력과 내수 성장전략으로의 정책 변화로 내년 위안화는 완만하게 절상될 것으로 전망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2013년 2.9%, 2014년 3.6%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2013년 104달러/배럴, 2014년 100달러/배럴

2. 2013~2014년 국내경제전망

■ 성장률: 2013년 2.6% → 2014년 3.4%

- 대외여건 개선속도가 기대 미흡해 우리 수출증가세 5%대 제한적 회복
 - 세계경제성장률 3.6%(IMF)는 2000~2007년 평균 4.2%에 미달
 - 다수의 리스크 요인들 산적
 - ✓미국: QE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 및 경기회복지연, 재정부실 관련 정치리스크
 - ✓유럽: 은행 자본 확충 미흡, 정부·민간 디레버리징, 高실업률 지속 등
 - ✓중국: 경제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성장률 둔화
 - ✓일본: 소비세율 인상, 아베노믹스 관련 불확실성 지속
 - ✓신흥국: 미국 QE 축소, 중국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 둔화
- 국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부진 지속
 - 가계 평균소비성향 하락 등 본격적인 디레버리징 조짐
 - 대내외 경기 회복 미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복지확대 관련 증세 등이 기업투자를 제약
- 성장흐름은 '상고하저', 내수보다는 수출이 성장 견인

■ 민간소비: 2013년 1.9% → 2014년 2.6%

- 부채 디레버리징, 주택 값 하락, 전세가 상승 등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의 성장률 하회현상 지속
 - 2003년 이후 평균 약 81%를 유지해오던 가계부문의 평균소비성향(=가계지출/소득)이 2012년 이후 78~79%로 약 2~3%p 하락 추세

■ 설비투자: 2013년 -3.0% → 2014년 4.8%

-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증가율은 약 5%의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 대외여건 개선속도가 미흡한데다, QE 축소 이후 글로벌 금리가 상승기조로 돌아

서면서 투자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정책들의 영향으로 투자심리 위축

■ 건설투자: 2013년 6.5% → 2014년 1.9%

- 주택시장의 증장기적 구조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4년 SOC예산이 전년대비 축소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3년에 비해 둔화

- 이미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예고

■ 수출증가율(BOP기준): 2013년 3.1% → 2014년 5.3%

- 미국 등 선진국의 점진적 수요개선의 영향으로 연간 약 5%대의 회복세

- 하지만 美 출구전략 시행, 신흥국 시장의 불확실성,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엔화 약세 등으로 증가속도는 미약

■ 수입증가율(BOP기준): 2013년 -0.5% → 2014년 4.8%

- 대내외경기 개선 및 기저효과(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하지만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 낮은 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2014년에도 수입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을 하회

■ 경상수지: 2013년 691억 달러 흑자 → 2014년 633억 달러 흑자

-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가 소폭 적자로 반전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줄어들 전망

- 상품수지는 미흡한 내수회복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큰 폭 흑자 지속
-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환율하락, 엔저 등을 감안할 때 2014년에는 적자추세를 보일 전망

■ 소비자물가: 2013년 1.2% → 2014년 2.2%

- 2014년 물가상승률 확대는 2%대 초반으로 제한될 가능성
 - 국내 물가변동의 주요변수인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하향안정세에 기인
 - 성장세가 낮아 GDP갭률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일 전망

■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3년 3.2% → 2014년 3.8%

- 美 QE 축소, 국내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 등이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글로벌 금리상승 추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승할 전망
 -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점증함에 따라 기준금리 정상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원/달러: 2013년 1,098원 → 2014년 1,072원

- 6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 충분한 외환보유고, 높아진 국가신용등급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환율이 하락(원화 상승)추세를 보일 전망
 - 다만 미 QE 축소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를 제약할 전망

2013~2014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0	1.9	3.3	2.6	3.5	3.3	3.4
(SA, 전기대비, %)		1.5	1.8		1.7	1.6	
민간소비	1.7	1.6	2.1	1.9	2.9	2.3	2.6
건설투자	-2.2	5.2	7.7	6.5	1.5	2.2	1.9
설비투자	-1.9	-8.2	2.7	-3.0	4.9	4.6	4.8
수출(재화+서비스)	4.2	4.6	3.6	4.1	4.8	6.5	5.6
수입(재화+서비스)	2.5	3.2	3.2	3.2	4.3	5.8	5.0
소비자물가	2.2	1.3	1.1	1.2	1.7	2.7	2.2
경상수지(억 달러)	481	298	394	691	287	346	633
상품수지(억 달러)	398	252	343	595	293	362	655
수출(억 달러, BOP 기준)	5,542	2,797	2,916	5,713	2,941	3,076	6,018
증가율(%)	0.4	1.6	4.6	3.1	5.2	5.5	5.3
수입(억 달러, BOP 기준)	5,144	2,545	2,573	5,118	2,648	2,715	5,363
증가율(%)	-1.1	-2.9	2.0	-0.5	4.0	5.5	4.8
서비스 등 기타수지*	83	46	50	96	-6	-16	-22
환율(원/달러, 평균)	1,127	1,103	1,092	1,098	1,066	1,078	1,072
회사채수익률(3년, AA-)	3.8	3.1	3.4	3.2	3.6	3.9	3.8
실업률(%)	3.2	3.4	3.0	3.2	3.2	3.0	3.1
취업자 증감(천 명)	437	290	409	349	347	329	338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Ⅲ. 이슈 분석: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1. 검토 배경

- 최근 입법화되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노동력 사용에 대해 수량적 제한만 가하는 이와 같은 제도들은 노동비용 증대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임금체계 개편/임금조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
- 이에 본고는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과 정부 및 기업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2. 노동시장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정년 60세 법안 통과

- 정년연장 의무화 및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013. 4. 30)
- 제19조 개정을 통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함
- 쟁점이 되었던 ‘임금조정’의 명시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대체됨
- 기업 규모 등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을 시행 시점으로 설정함
- 정년연장 법안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 고직급 장년 인력의 과다 문제 발생
-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증가시 고직급/고연령 가속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짐

- 인건비 총액 및 고직급 인력 총량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정년 60세 법안 안착을 위한 전략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생산성이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 고직급 장년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간부급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 시행 가능성이 높음
-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연동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 고직급 장년 인력의 효과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2) 통상임금 범위 확대

- 대법원은 임금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2013. 12. 18)
-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 임금이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정기성)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결
 - 또한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일률성)되고, 그 지급여부 및 액수가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고정성) 통상임금에 포함됨
-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전망
-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00인 이상 기업의 부담 증가는 첫째 약 11조 3,800억 원
 - 1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하는 경총의 추정액은 13조 7,000억

-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운수업의 부담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
- 주요 산업별로 투자 및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건비 상승, 통상임금 관련 소송 대비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에 대한 외
국기업의 투자 역시 지체될 것으로 판단
 - 또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이 위축될 전망
-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수혜가 집중
되어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
-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체계 단순화가 선행되어야 함
 -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각종 수당의 체계를 단순화하여
장래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해야 함
 - 특히, 임금과 근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임금체계 단순·명확화 및 생
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함
 -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근로의식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이 반드시 필요함

(3) 시간선택제 근로 확산

- 시간제 일자리 정책방향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전략”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의 투
트랙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전략’은 단시간 근로의 근로여건 개선에 중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은 근로시간의 유연화 관점에서 추진
 - 유연한 형태의 근로시간을 개발하여 구직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 반듯한 단시간 근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비례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의 적용 영역 명시,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요건 설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핵심

- 우선 단시간 근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시간 근로의 정의 및 대상범위, 초과근로 제한 방식 및 범위, 시간비례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의 균형과 적용 영역 명시 등이 필요
- 명실상부한 시간선택제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 자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필요
 - 다만, 통상근로자 전환권을 요구하기 위한 일정 조건을 명시하고 경영상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설정해야 함
- 시간선택제 근로의 확대 및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
- 일정 요건 하에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보장
- 근로자 모집 시 시간선택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필요

3. 정책적 시사점

- 노동제도 개편에 앞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선 논의가 있어야 함
- 임금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확대에 기여하고 고용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 이분화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함
 - 대기업·정규직·有노조 중심의 지대추구 행위를 차단
 - 임금직무체계 개편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일치
- 직무와 성과, 능력 및 역할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 성장력 감소 및 고령인구 확대에 대비해 직능급과 직무급의 혼합형을 검토
- 복잡한 임금체계, 취업규칙 변경 등을 개선해 제도적 경직성을 극복해야 함
 - 수당체계 단순화를 통해 임금과 근로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함
 - 취업규칙 변경 조건의 유연화도 검토
-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극복
 - 임금체계 개편 시 임금감소 우려 등은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극복
 - 임금조정과 고용안정성/고용연장 등을 맞교환하는 접근방식 필요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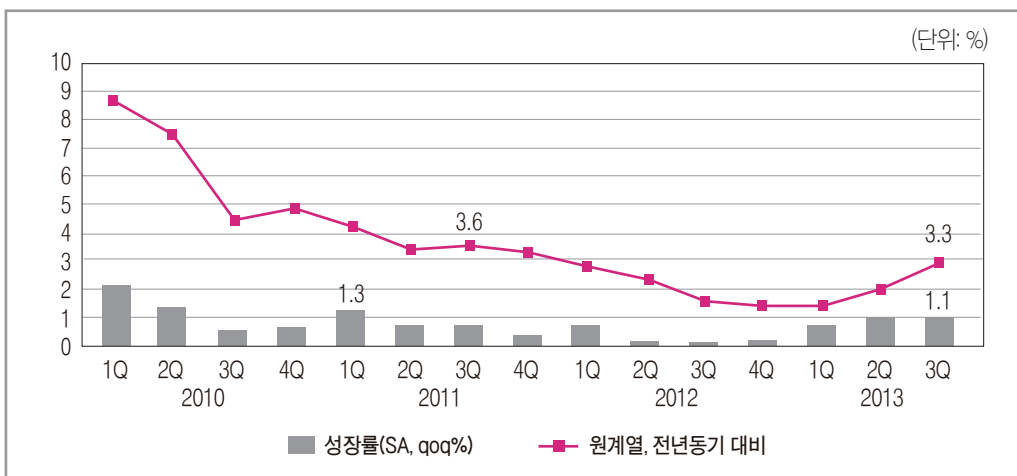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5. 금리와 환율

1. 경제성장

■ 성장률, 2013년 3분기 전기 대비 1.1%, 전년동기 대비 3.3% 기록

-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저성장 장기화의 우려는 다소 완화
 -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이어진 0%대의 저성장에서 탈출
 - 원계열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3분기(3.6%) 이후 7분기 만에 반등

〈그림 I-1〉 실질 GDP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

- (민간소비) 전기 대비 증가율 확대 : 1/4분기 -0.4% → 2/4분기 0.7%
→ 3/4분기 1.0%
 - 경기부진 지속, 가계부채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세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등 소비증가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

- (건설투자) 토목건설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전기 대비 증가율이 2013년 2분기에 3.4%, 3분기에는 3.2%로 증가세 유지
- (수출입 물량) 3분기 수출입 모두 전기 대비 감소
 - 수출은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0.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반도체 등이 줄어 0.4% 감소
- (설비투자) 항공기 등 운송장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기 대비 1.0% 증가

〈표 1-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단위: %)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0.8	0.4	0.7	0.8	-0.4	0.7	1.0
건설투자	-1.5	-1.3	0.7	-1.2	4.1	3.4	3.2
설비투자	10.4	-7.8	-5.2	-1.8	2.6	-0.2	1.0
수출(재화)	4.6	-0.9	2.3	-1.2	4.3	0.6	-0.8
수입(재화)	3.6	-1.7	1.7	-1.6	3.2	1.8	-0.4
국내총생산	0.8	0.3	0.0	0.3	0.8	1.1	1.1

(원계열, 전년동기 대비)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1.3	1.0	1.7	2.7	1.5	1.8	2.1
건설투자	-0.4	-3.1	-0.3	-4.2	2.4	7.2	8.6
설비투자	8.8	-3.5	-6.9	-5.2	-11.9	-4.6	1.5
수출(재화)	4.7	2.4	3.2	4.7	4.5	6.0	2.8
수입(재화)	4.4	-0.1	0.3	1.7	1.5	5.1	2.9
국내총생산	2.8	2.4	1.6	1.5	1.5	2.3	3.3

자료: 한국은행

- 2, 3분기 성장률 반등은 정부 재정책대의 영향에 주로 기인
 -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재정의존 부문이 성장 주도
 - 2분기 정부소비의 기여도는 0.4%p로 약 3배 규모의 민간소비(0.4%p)와 같은 기여도를 기록
 - 건설투자는 SOC투자예산 확대, 예산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2, 3분기중 0.5%p 기여도 유지
 - 반면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부문 관련 기여도는 하락
 - 설비투자의 경우 3분기 기여도가 0.1%p에 불과
 - 수출(재화와 서비스) 기여도는 1분기 1.7%p에서 2분기 1.1%p로 하락했으며 3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

〈표 I -2〉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단위: %p)

(계절조정, 실질, 분기)	2012년				2013년		
	1/4	2/4	3/4	4/4	1/4	2/4	3/4
최종소비지출	0.9	0.2	0.5	0.3	0.0	0.8	0.5
민간	0.4	0.2	0.4	0.4	-0.2	0.4	0.5
정부	0.5	0.0	0.1	-0.1	0.2	0.4	0.0
총고정자본형성	0.8	-1.0	-0.4	-0.4	1.0	0.6	1.1
건설투자	-0.2	-0.2	0.1	-0.2	0.6	0.5	0.5
설비투자	1.0	-0.8	-0.5	-0.2	0.2	0.0	0.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2.2	-0.2	1.1	-0.6	1.7	1.1	-0.8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2.2	-1.0	1.0	-0.4	1.3	0.6	-0.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0.8	0.3	0.0	0.3	0.8	1.1	1.1

자료: 한국은행

2. 수출입 및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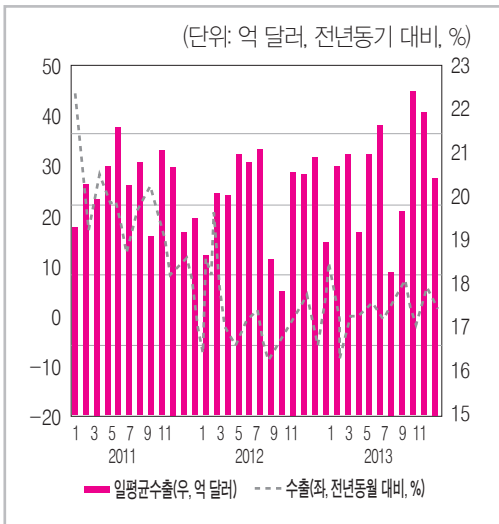
■수출(통관기준)은 1분기 0.4%, 2분기 0.7%, 3분기 2.8%, 10~11월 3.7%로 호조세 확대

- 10~11월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21.2억 달러 기록

- 3분기, 지역별로는 對일본 수출이 부진한 반면 對미, 對EU 수출은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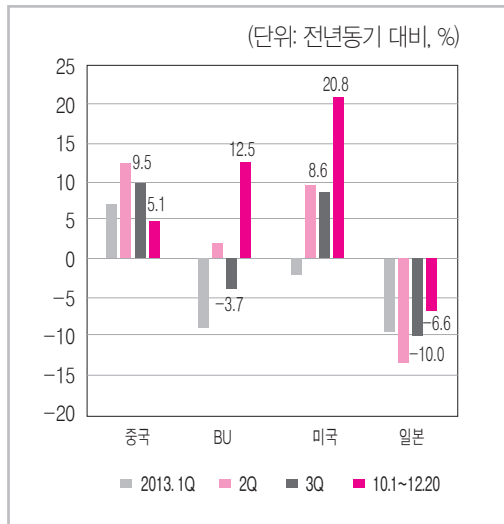
- 對일본은 석유제품·철강·화공품의 수출부진에 따라 감소세를 지속
- 미국과 EU의 완만한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對EU 수출은 석유제품·가전·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對미 수출은 무선통신·가전·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對중국은 가전·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석유제품·디스플레이패널·무선통신기기 등의 감소로 증가세 둔화

〈그림 1-2〉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그림 1-3〉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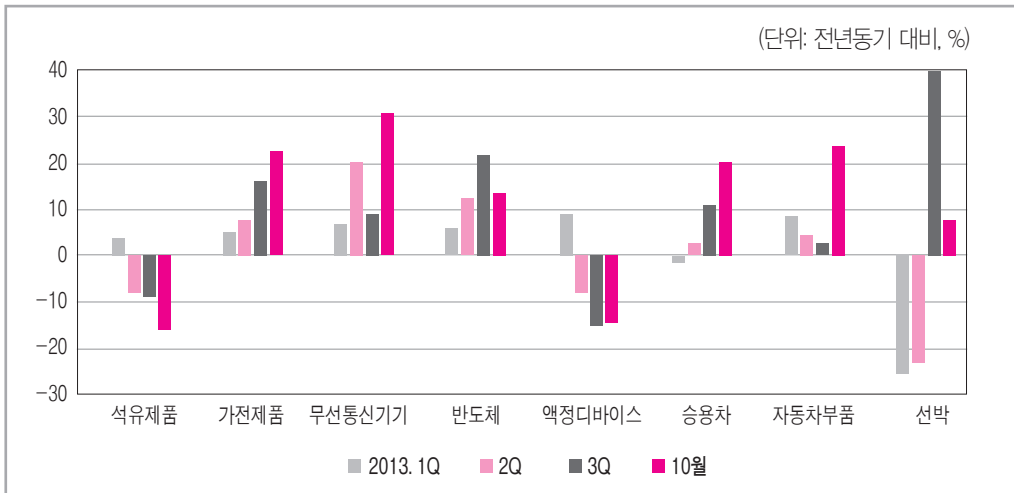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품목별로는 신제품이 출시되고 무선통신기기, 메모리의 단가가 상승하여 반도체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석유제품·LCD 등의 수출은 부진

- 전기전자부품·화장품·플라스틱제품 등 품목의 선전과 소재, 부품 위주의 품목 다변화에 기인

〈그림 I-4〉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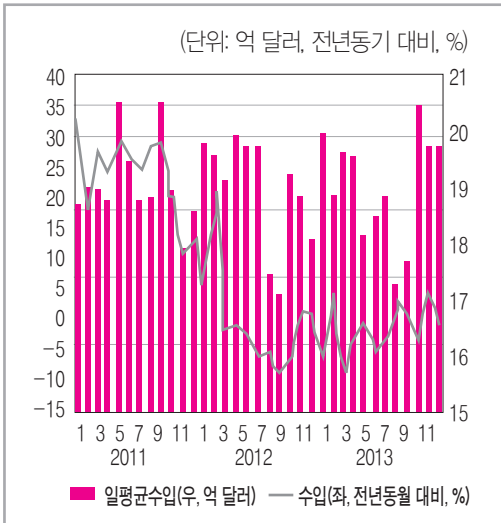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수입(통관기준)은 1분기 -3.0%, 2분기 -2.8%, 3분기 0.2% 증가에서 10~11월 2.3% 증가로 상승폭 확대

- 10~11월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18.5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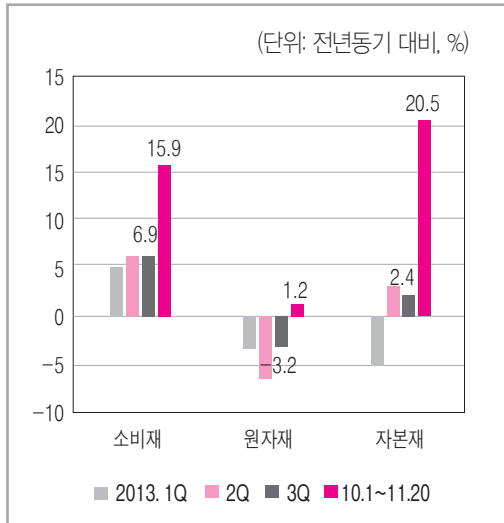
- 용도별로는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이 연내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된 가운데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

〈그림 1-5〉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그림 1-6〉 용도별 수입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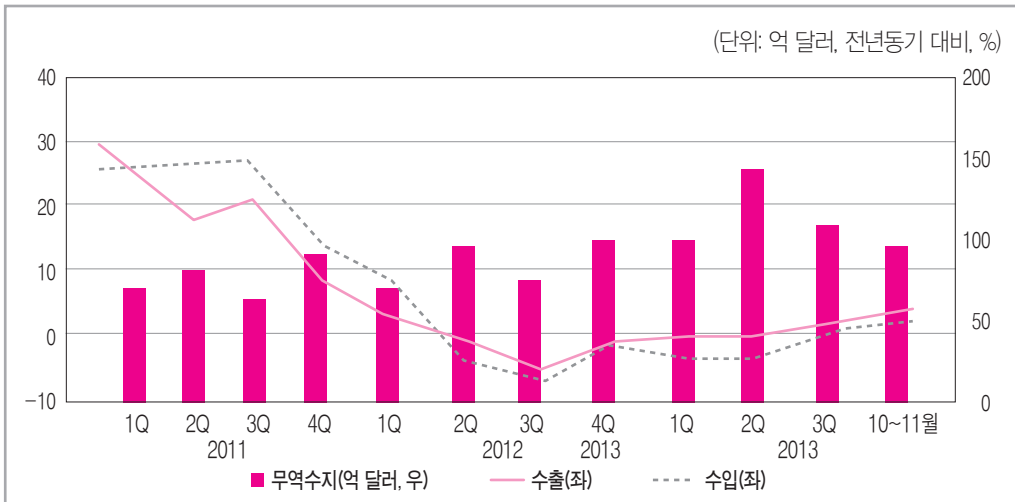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무역수지, 10~11월중 96.9억 달러 흑자(전년 81.3억 달러 대비 15.6% 증가)

-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의 증가율이 수입의 증가율을 상회
 - 수출입증감률: 3.7%(10~11월 수출), 2.3%(10~11월 수입)

〈그림 1-7〉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경상수지 흑자, 올 1~10월중 누적 규모 582.6억 달러(2012년 2월 이후 연속 21개월 흑자)
 - 경상수지 흑자, 전년동기 대비(2012년 1~10월중 382.0억 달러) 201억 달러 확대
 - 상품수지(179억 달러), 서비스수지(10억 달러), 이전수지(19억 달러)는 흑자확대
 - 반면 본원소득수지(-7.8억 달러)는 적자
 - 하반기 들어서도 경상수지의 월평균 흑자규모 확대 추세 지속
 - 월평균 흑자: 49.6억 달러(1~6월중 월평균) → 71.2억 달러(7~10월중 월평균)

〈표 1-3〉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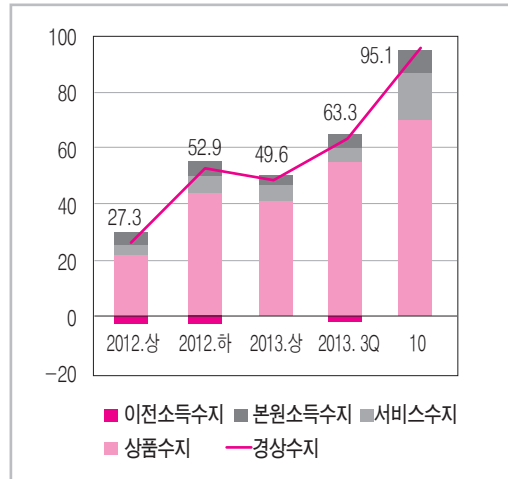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2012		2013		
	상반	하반	상반	3Q	10월
경상수지	163.6	317.2	297.7	189.8	95.1
상품	132.0	266.1	251.8	166.2	70.3
서비스	20.4	37.0	32.8	13.3	16.5
본원소득	28.7	28.5	14.4	15.7	7.9
이전소득	-17.5	-14.3	-1.2	-5.4	0.5

자료: 한국은행

〈그림 1-8〉 월평균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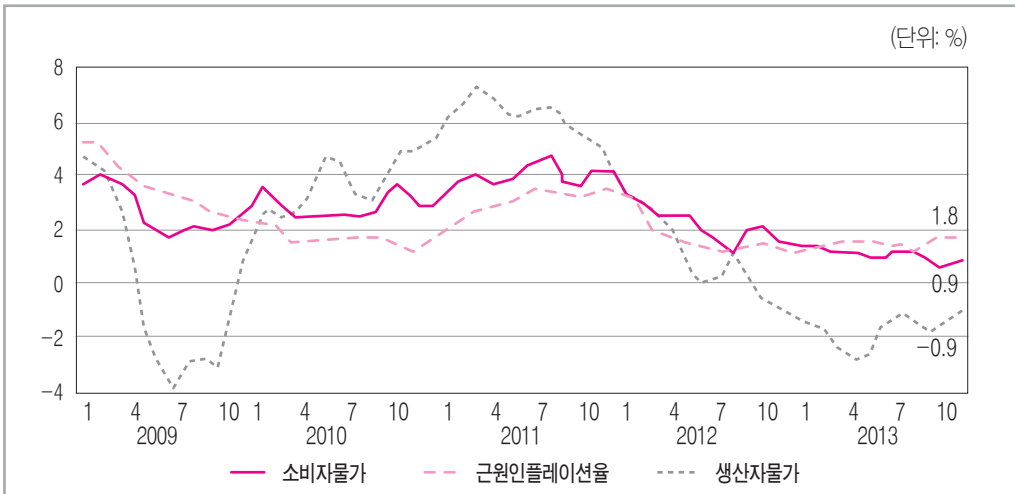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물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저물가 지속

- 작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1%대, 올해 9월부터는 0%대 증가율 지속
 -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의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
 - 내수부진 지속에 따른 수요부진도 저물가에 가세
 - 한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확대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2012~2013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술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생산자물가는 작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그림 1-9〉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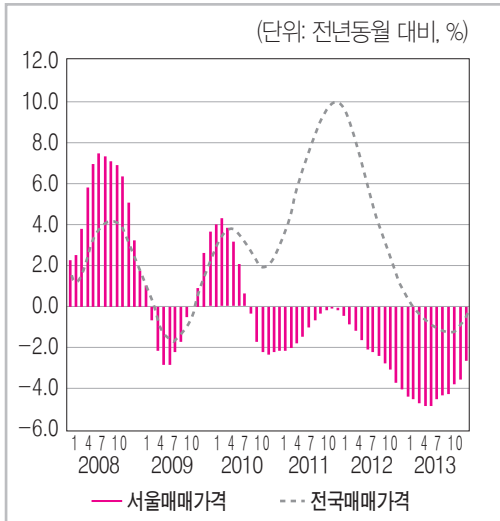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완화, 전세가격은 증가세 확대

-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서울 모두 하락세 지속하고 있으나 하락 폭은 축소
 - 전국(전년동기 대비): -1.0%(3월) → -1.2%(6월) → -0.7%(9월) → 0.0%(11월)
 - 서울(전년동기 대비): -4.8%(3월) → -4.2%(6월) → -3.3%(9월) → -2.2%(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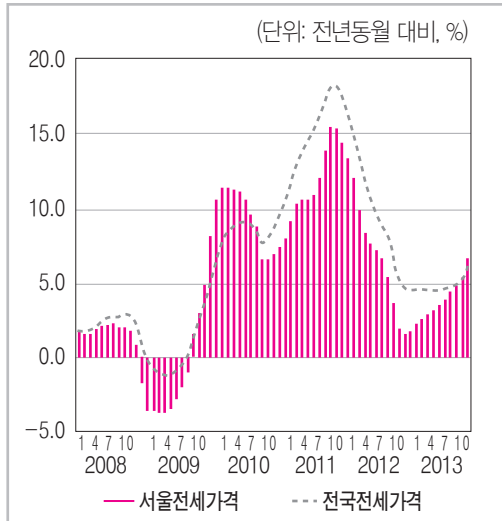
-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세 더욱 심화
 - 전국(전년동기 대비): 4.2%(3월) → 4.4%(6월) → 5.8%(9월) → 6.6%(11월)
 - 서울(전년동기 대비): 3.2%(3월) → 4.2%(6월) → 6.9%(9월) → 8.3%(11월)

〈그림 1-10〉 아파트매매가격



자료: 통계청

〈그림 1-11〉 아파트전세가격



자료: 통계청

4. 고용

■ 전체 취업자 수, 고령취업자 중심의 양적 확대 지속

- 2013년 11월 취업자 증감(전년동월 대비)은 58만 8천명으로 상승 추세 지속
 - 전체 취업자 증감(천 명): 257(2013. 1분기) → 324(2분기) → 421(3분기)
 - 476(10월) → 588(11월)
- (연령별) 10~11월 청년취업자 증가로 전환, 고령취업자 증가세도 확대 지속
 - 15~29세(천 명): -117(2013. 1분기) → -89(2분기) → -41(3분기)
 - 32(10월) → 54(11월)
 - 50세 이상(천 명): 377(2013. 1분기) → 410(2분기) → 466(3분기)
 - 479(10월) → 511(11월)

- (산업별) 10~11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은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위축되었던 제조업의 고용 증가세가 소폭 회복
 - 반면 건설업은 10월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된 후 지속 중이고, 농림어업도 11월 들어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

■ 실업률, 11월 2.7%로 하락세 지속

- 실업률(%): 3.6(2013. 1분기) → 3.1(2분기) → 3.0(3분기) → 2.8(10월) → 2.7(11월)

〈표 I -4〉 실업률 및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전년동분기 대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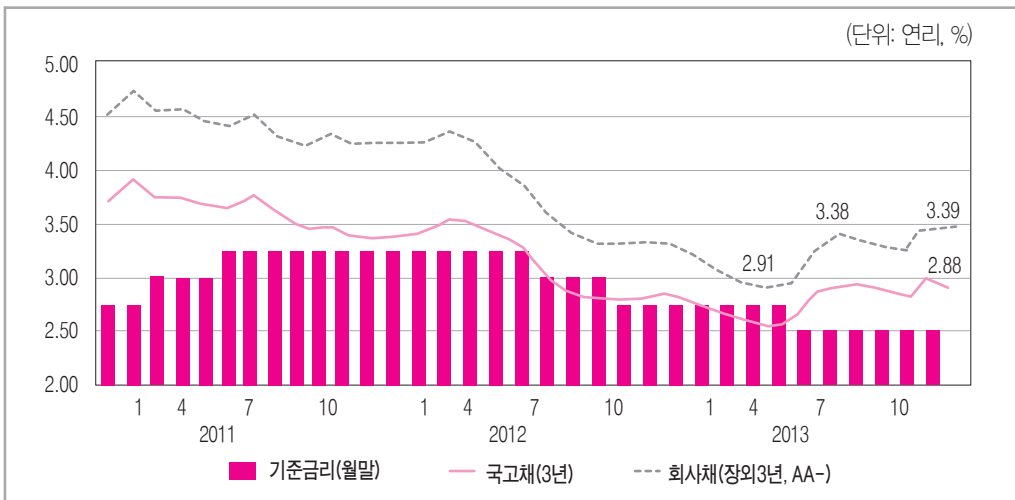
		2012	2013				
		연간	1Q	2Q	3Q	10월	11월
취업자 증감(천 명)		437	257	324	421	476	588
연령별	- 15 ~ 29세	-36	-117	-89	-41	32	54
	- 30 ~ 39세	-31	-15	8	-34	-78	-36
	- 40 ~ 49세	11	12	-6	30	42	58
	- 50 ~ 59세	270	196	254	279	288	277
	- 60세 이상	222	181	156	187	191	235
산업별	- 농림어업	-14	-9	-27	19	15	-31
	- 제조업	14	119	122	26	31	35
	- 건설업	22	-64	-6	4	-14	-18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04	-37	-12	41	93	14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272	258	154	218	316	388
	- 전기·운수·통신·금융	41	-12	92	112	36	65
실업률(%)		3.2	3.6	3.1	3.0	2.8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금리와 환율

- 금리, 11월 이후 美 양적완화 축소 임박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추세
 - 8월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 美 재정문제 등을 감안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신중한 시행이 예상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도 다소 완화되고 금리도 하락세로 반전
 - 하지만 11월 이후 미국 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했다는 경계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임
 - 회사채(3년만기, AA-): 3.38%(7월) → 3.25%(10월) → 3.39%(12/1~12/20)

〈그림 1-12〉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수 확대와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상반기 중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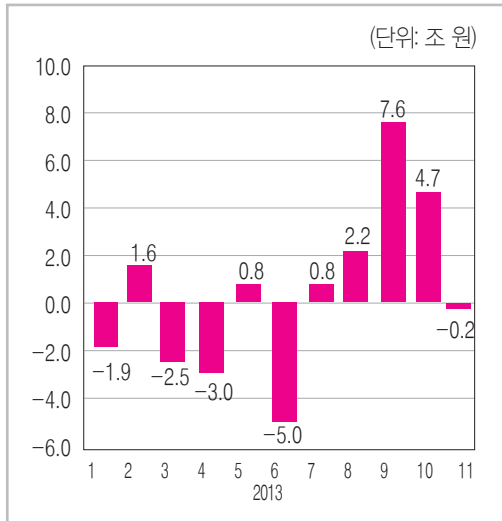
-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확대와 북한발 리스크
 - 이후 미국 양적완화 축소 언급 등으로 환율 상승압력 가중
- 하지만 하반기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다시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반전
- 외국인 주식 순매수 금액: -10.0조 원(1~6월) → 15.1조 원(7~11월)
 - 경상수지: 49.6억 달러(1~6월중 월평균) → 71.3억 달러(7~10월중 월평균)

〈그림 1-13〉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4〉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료: 한국은행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1) 세계경제 성장
- (2) 국제 원자재 가격
- (3) 주요국 환율

2. 2014년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4년 세계 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 신흥개도국에 쏠려있던 세계경제 성장의 추가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양상
 - 2013년 올해와 2014년 내년 선진국의 성장률은 1.2%, 2.0%로 0.8%p 증가, 신흥개도국은 4.5%, 5.1%로 0.6%p 증가할 전망
- 미국의 고용 시장, 소매판매 지표가 좋아지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내년 시행됨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및 이탈리아, 스페인의 완만한 성장세가 선진국의 회복 국면으로의 안착을 도울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성장 둔화는 매우 완만한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브라질 등의 성장률 낙폭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 출구전략의 단계적 시행과 맞물린 신흥개도국의 성장세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표 II-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 전망(IMF)

(단위: %)

	실적치		2013.10월 현재 전망치		2013.7월 전망치와 비교(p%)		4/4분기 전망치 (전년동기 대비)		
	2011	2012	2013	2014	2013	2014	2012	2013	2014
세계	3.9	3.2	2.9	3.6	-0.3	-0.2	2.7	3.1	3.6
선진국	1.7	1.5	1.2	2.0	0.0	0.0	0.9	1.8	2.1
미국	1.8	2.8	1.6	2.6	-0.1	-0.2	2.0	1.9	3.0
영국	1.0	0.2	1.4	1.9	0.5	0.4	0.2	1.1	1.7
유로존	1.5	-0.6	-0.4	1.0	0.1	0.0	-1.0	0.4	1.1
- 독일	3.1	0.9	0.5	1.4	0.2	0.1	0.3	1.3	1.1
- 프랑스	2.0	0.0	0.2	1.0	0.3	0.1	-0.3	0.5	1.1
- 이탈리아	0.4	-2.4	-1.8	0.7	0.0	0.0	-2.8	-0.9	1.4
- 스페인	0.4	-1.6	-1.3	0.2	0.3	0.1	-2.1	-0.2	0.2
일본	-0.6	2.0	2.0	1.2	-0.1	0.1	0.3	3.5	0.2
신흥개도국	6.2	4.9	4.5	5.1	-0.5	-0.4	4.9	4.7	5.4
중국	9.3	7.7	7.6	7.3	-0.2	-0.4	7.9	7.6	7.2
인도	6.3	3.2	3.8	5.1	-1.8	-1.1	3.0	3.9	5.8
브라질	2.7	0.9	2.5	2.5	0.0	-0.7	1.4	1.9	3.6

■ (미국) 고용 지표의 호조와 민간 부문의 소비세 회복으로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행이 결정되고 내년 예산안도 합의됨에 따라 2014년 미국 경제는 부채한도증액 등의 하방 리스크가 있으나 올해보다 성장세를 확대할 전망

- 3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2.0%)을 넘어 4.1% 성장하기는 했으나 기저효과 및 연방 정부 폐쇄 등의 영향으로 2013년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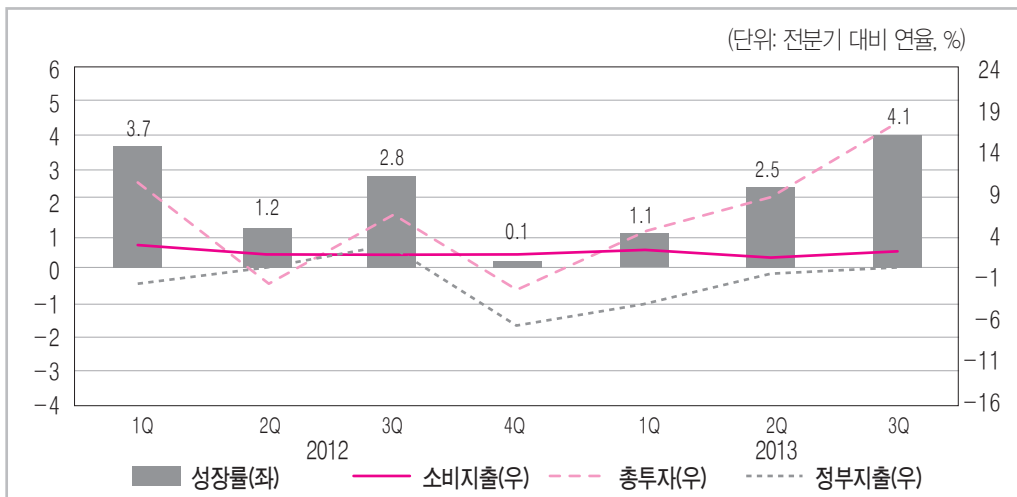
- 정부지출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3분기 0.4% 플러스 성장한 데 더해 소비지출의 성장률이 2.0%로 2분기 1.8%에서 소폭 성장세 증가했고, 총투자가 2분기 9.2%에서 3분기 17.2%로 증가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에 따라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

- 다만, 총투자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1분기 0.71%에서 2분기 1.38%, 3분기 2.56%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부분

※ 3분기부터 미국 상무부는 실질성장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연쇄지수

의 기준을 2005년에서 2009년으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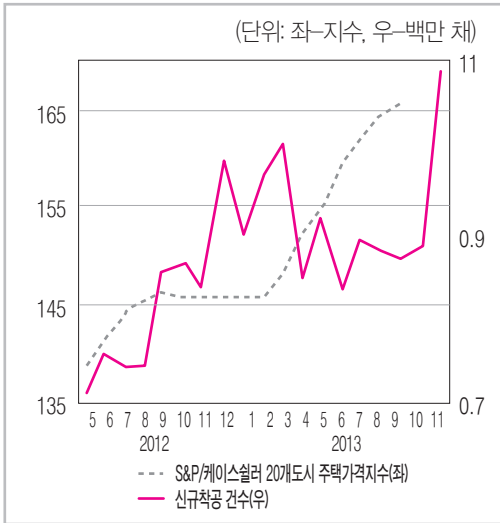
〈그림 II-1〉 미국의 분기별 실질성장률과 지출단위별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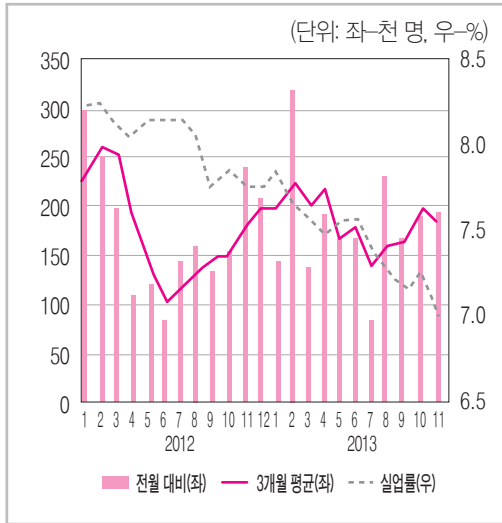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규착공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이 7%대이기는 하나 하락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향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그림 II-2〉 미국 주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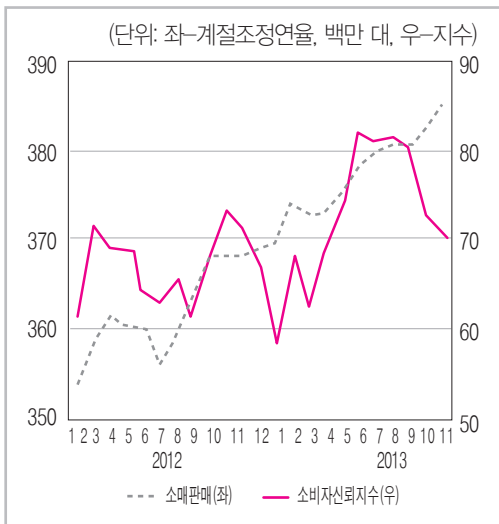


〈그림 II-3〉 미국 고용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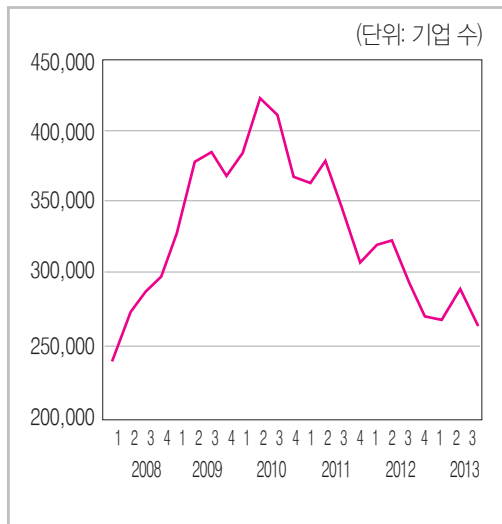


- 도산 기업 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고, 소매판매의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회복이 예상
- 다만,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려

〈그림 II-4〉 미국의 민간소비 추이



〈그림 II-5〉 미국의 도산 기업 수



- 12월 FOMC에서 버냉키 의장 내년부터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고, 초저금리는 지금처럼 유지할 것임을 발표
 - 고용시장 및 소매판매의 호조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 현재 850억 달러의 채권 매입 수준을 750억 달러로 낮출 것을 시사
 -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0%대 기준금리는 유지
- 주택 가격의 급등, 실업률의 추가 하락 필요, 부채한도상한 증액 협상 등의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2014년 미국 경기는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14년은 올해보다 증가한 2.6%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표II-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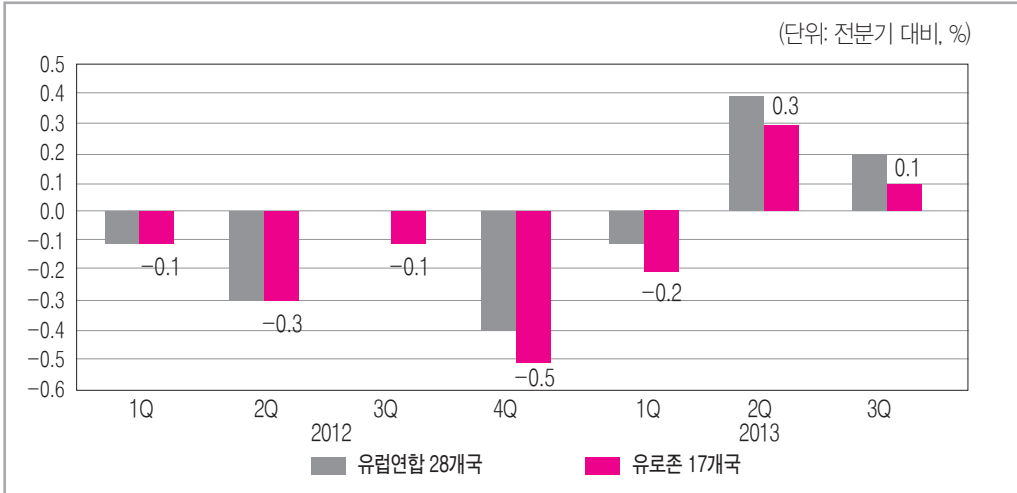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1.8	2.8	1.6	2.6
고용증가율	0.6	1.8	1.1	1.4
실업률	8.9	8.1	7.5	6.9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3)

- (유로지역)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민간부문의 경기체감지수 및 생산, 무역수지 확대와 양적완화 유지의 정책적 의지에 힘입어 2014년 유로 지역은 위축에서 벗어나 1.0% 플러스 성장할 전망
- 3분기 유로존의 경제가 2분기보다 성장세를 둔화함에 따라 2013년 유로존은 0.4% 위축에서 더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 3분기 독일이 0.3% 성장, 프랑스가 0.1% 위축, 이탈리아가 0.1% 위축, 스페인 0.1% 성장, 포르투갈 0.2%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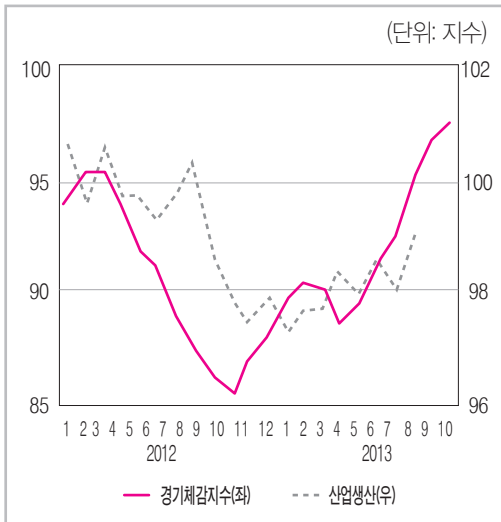
〈그림 II-6〉 유럽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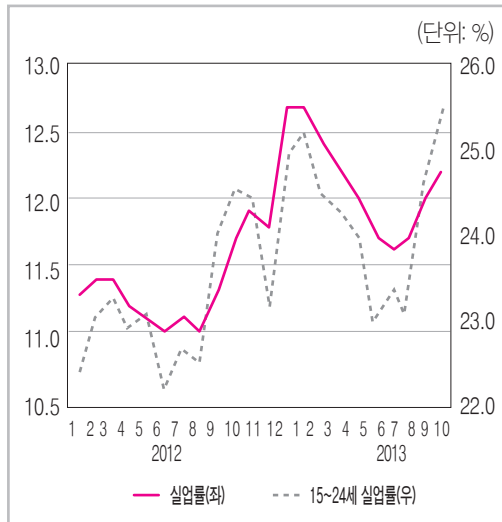
- 유로존 17개국의 경기체감지수 급등이 지속되고 실질적인 산업생산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머물고 있는 실업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

〈그림 II-7〉 경기체감지수와 산업생산 추이



자료: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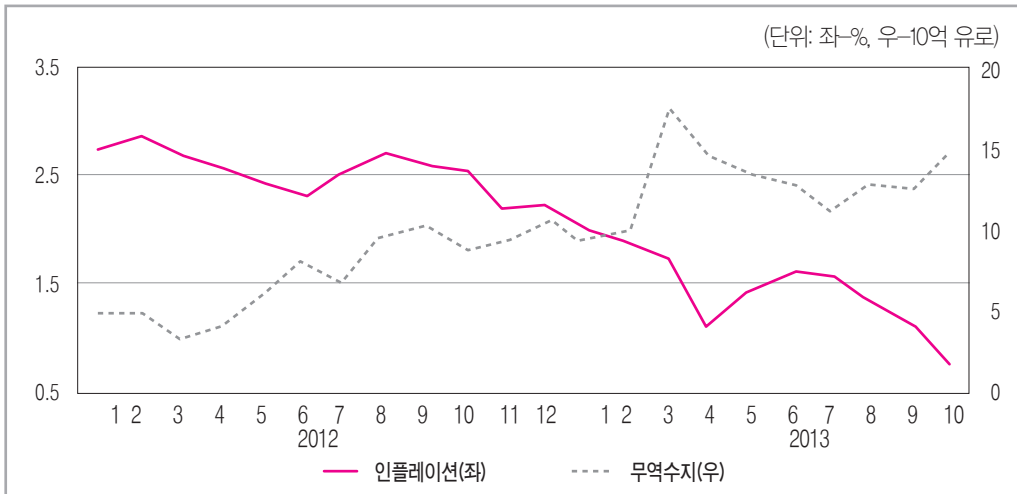
〈그림 II-8〉 실업률



자료: Eurostat

- 무역수지가 확대되며 경기위축으로부터의 회복을 점치게 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월 0.7%까지 떨어지며 디플레이션 우려

(그림 II-9)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Eurostat

- 11월 7일 유럽중앙은행은 예상 밖으로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25%로 25bp 내리며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지속 의지를 천명했고, 이러한 정책적 의지에 힘입어 2014년 유로지역은 비로소 1.0%의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남유럽 일부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실질금리 마이너스)하자 자산매도 증가, 물가 추가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취
 -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했고, 스페인, 아일랜드는 구제 금융에서 해방됨에 따라 유럽경기 위축의 주범이었던 남유럽의 경기가 회복될 전망
- 3선이 확정된 메르켈 독일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은행동맹의 진전 기대도 유로존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

- 유럽중앙은행 및 유럽이사회 등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에의 카드를 거의 소진한 상태라 내년 경기 회복은 은행 동맹의 시행과 은행권 부실 문제의 근원적 해결, 국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적 노력 등 정치적인 협상이 키워드

〈표II-3〉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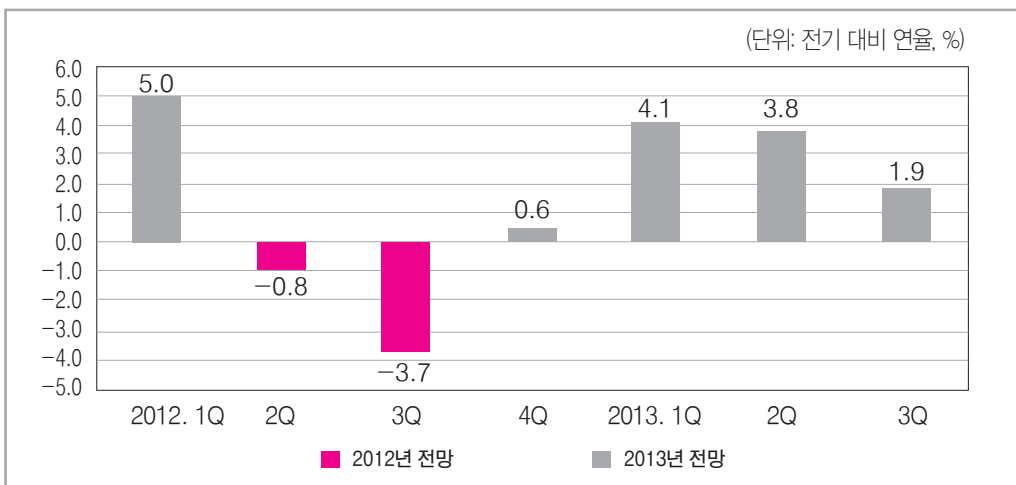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1.5	-0.6	-0.4	1.0
고용증가율	0.3	-0.7	-0.9	0.0
실업률	10.1	11.3	12.0	12.1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3)

- (일본) 내수 생산과 판매, 인플레이션 및 현재경기체감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2014년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4.1%, 2분기 3.8%에 이어 3분기에는 1.9%로 성장둔화를 보임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3화살 조합에 다소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풀이되며 2013년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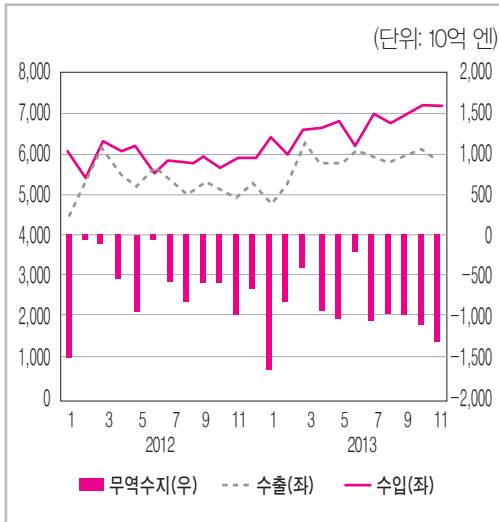
〈그림II-10〉 일본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자료: 일본 경제사회조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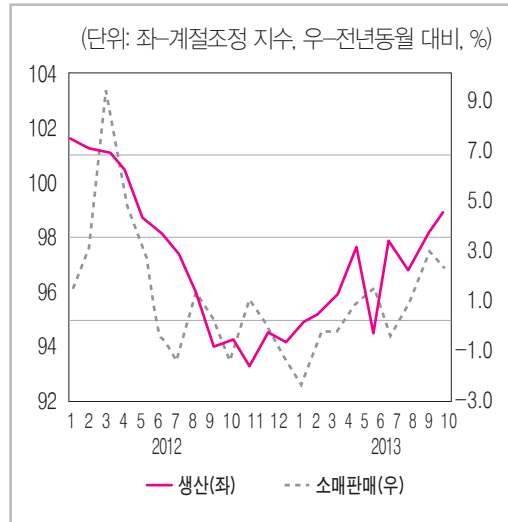
-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유지되고 있으나, 내수 생산과 소매판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일본 경기 전망에 긍정적

〈그림 II-11〉 일본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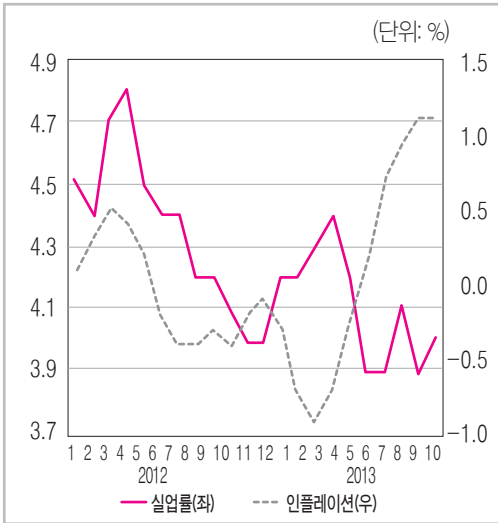
〈그림 II-12〉 일본의 생산과 소매판매



자료: 일본 경제무역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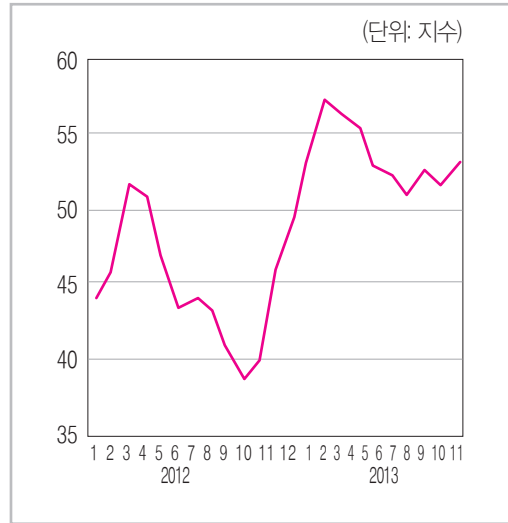
- 실업률 4%대 하단 돌파를 위한 지속적 시도, 물가상승률 1.1%로 상승과 더불어 현재경기지수가 변동성은 있으나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

〈그림 II-13〉 일본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자료: 일본 통계청

〈그림 II-14〉 일본의 현재경기지수



자료: 일본 내각부

- 내년 4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릴 예정. 이로 인한 민간 부문 위축을 고려하여 2014년 일본은 올해보다 둔화된 1.2%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표 II-4〉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0.6	2.0	2.0	1.2
고용증가율	-0.1	-0.3	0.5	0.0
실업률	4.6	4.3	4.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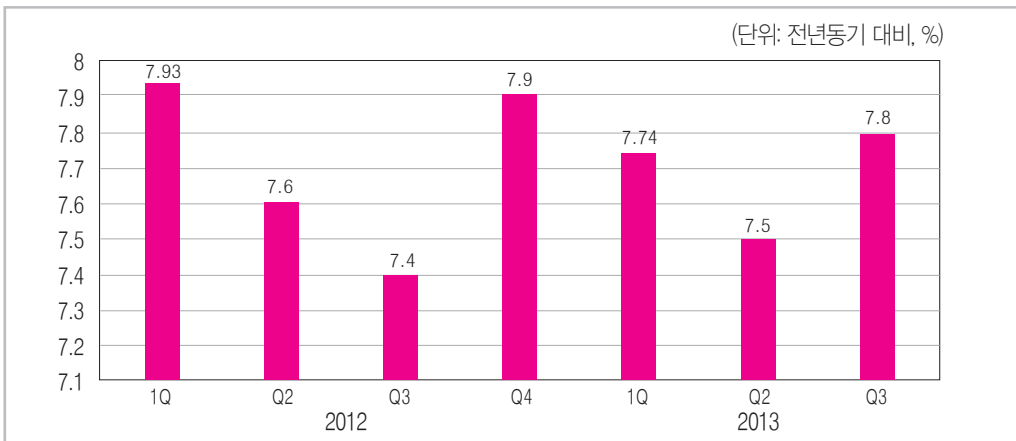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3)

- (중국) 내수 및 무역수지가 비교적 호조세 유지 중이나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 변화 등 정책적 큰 그림의 개혁으로 인해 2014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완만히 둔화할 전망

- 유럽의 위축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중국의 해외 수요가 살아나지 못한 데다 그림 자금용, 부동산 버블 등으로 경착륙이 우려되었으나 3분기 중국은 견조한 7.8% 성

장을 시현하며 2013년 7.6% 성장을 예견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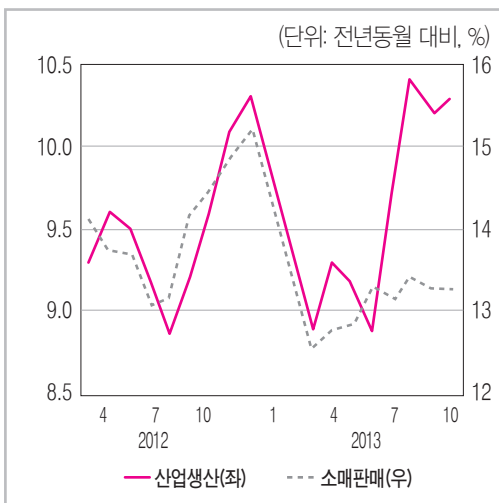
〈그림 II-15〉 중국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자료: C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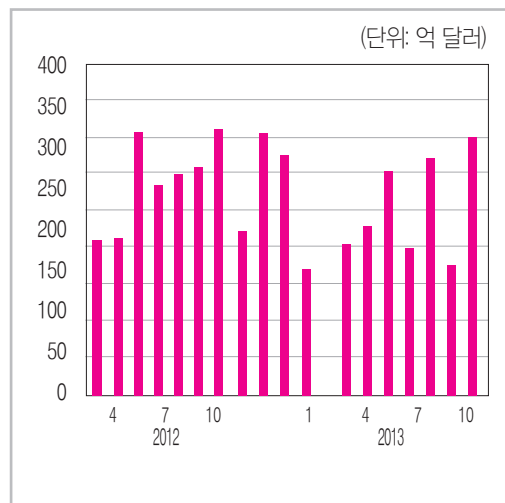
–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상승세를 보이며 내수를 견인하는 데다, 무역수지 폭이 10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그림 II-16〉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자료: 중국 통계청

〈그림 II-17〉 중국의 무역수지



자료: 중국 관세청

-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회의(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 관련 중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의 7대 과제 제시
 - 개혁의 핵심을 경제시스템 개혁으로 설정하고,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역할 강조
 -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

〈표 11-5〉 3중전회 7대 과제

개혁분야	주요 내용
기본 경제제도 완비	공유제 경제의 주도적 지위 견지,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조력 발휘,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국유기업 개혁
시장시스템 개선	개방적인 공정경쟁시장 시스템 구축,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금융시스템 완비(위안화환율제도 정비, 금리 및 자본자유화 가속화 등)
정부기능 전환	효과적 정부관리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장점 발휘, 행정체제 개혁 심화, 법치·서비스형 정부 건설, 거시조정시스템 완비
재정조세제도 개혁	법률제도 완비, 세제 개혁, 현대적 재정시스템 구축, 예산관리제도 개선
도농일체화	농민재산권 강화, 농민의 현대화 과정 참여,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 구축, 호적제도 개혁(소도시부터 단계적 실시)
대외개방 촉진	대내외 개방 촉진, 외국인투자자 and 대외직접투자자의 조화, 투자 진입장벽 완화,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내륙지방의 국경무역 확대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의 재산권과 용도관리제도 정비, 자원의 유상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 실시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7호

- 큰 틀에서 새로운 경제 개혁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 2014년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완만하게 둔화된 7.3% 전망

〈표 II-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9.3	7.7	7.6	7.3
경상수지(% GDP 대비)	1.9	2.4	2.3	1.5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3)

(2) 국제 원자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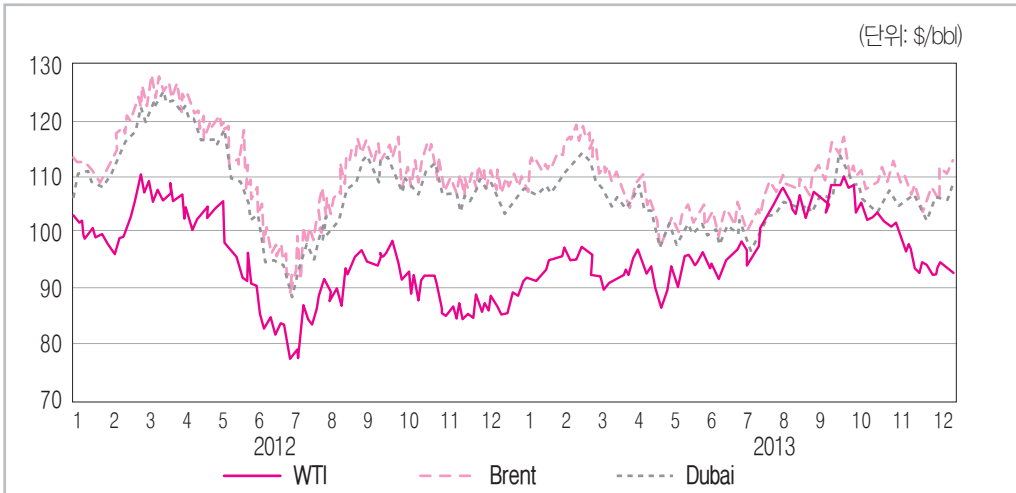
1) 국제유가

-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 개선 분위기,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MENA 지역의 정정불안, 이란의 핵 협상 등의 수급 불안 요인에 따라 비교적 좁은 박스권의 등락을 거듭하던 국제유가는 안정세 보이며 연초와 유사한 레벨로 하락(12/4 현재 두바이유, 올 초보다 1.3달러 높은 상황)
- 연내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 개선 분위기가 보일 때마다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

 - 그러나 연초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 하반기 미국의 연방정부 일시 폐쇄와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유가 상승이 제한적
 -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개시, 유럽의 은행 부실 문제의 장기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예정 등 정책적인 하방 리스크가 점차 등장함에 따라 수요가 꺾이며 유가 하락
-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집트 등 크고 작게 지속되는 MENA 정정불안과 이란의 핵 협상이 세계석유 공급 혹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유가를 상승 견인

 - 그러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으로 유가 하락 안정
 - 또, 6개월 시한이기는 하나 이란과 서방의 핵 협상 타결이 유가 안정에 일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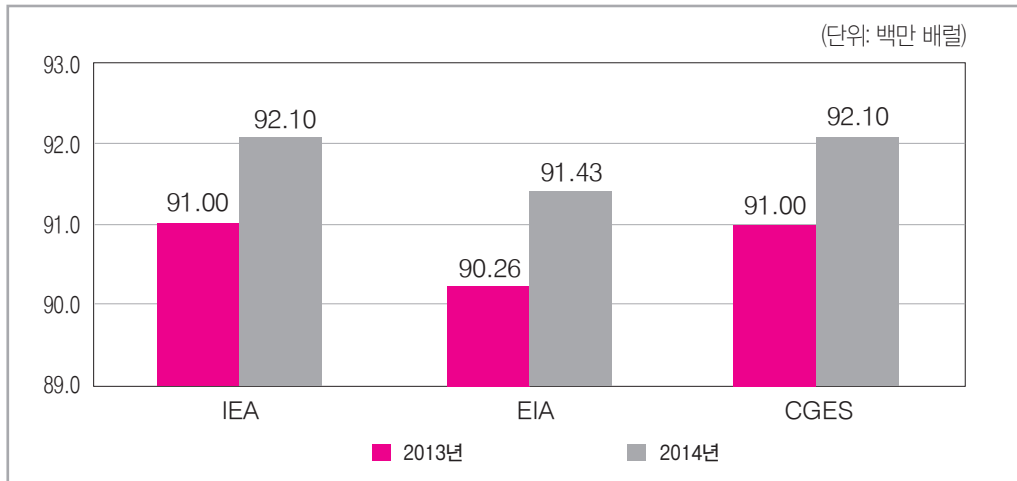
〈그림 11-18〉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수요측면) 2014년 글로벌 경기의 호전에 따라 非OECD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세계 석유 수요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EA, EIA 등 주요 기관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에 따르면 내년 수요는 금년 대비 +1.3%(9,210만 배럴)로 올해의 +1.1%(9,100만 배럴)보다 소폭 확대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IMF는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6%로 올해의 2.9%보다 0.7%p 높게 전망
 - 내년 非OECD 수요는 OECD 수요 규모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非OECD 수요는 중국의 수요 증가세 +4.1%, 인도 +2.7%를 중심으로 총 3.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한편, 2014년 OECD 수요는 미국의 +0.1%, 유럽의 -1.3% 등으로 총 0.4%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그림 II-19〉 2013년과 2014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



주: 전망 시점에서의 2013년 원유 수요를 나타냄

자료: IEA 석유시장보고서(2013, 10월)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2013, 10월) CGES 보고서(2013, 10월)

- (공급측면) 2014년 세계 석유 생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非OPEC의 생산 증가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비중이 내년 非OPEC의 7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혁명
으로 내년 非OPEC 석유 생산량은 올해보다 2.2~3.3% 증가한 하루 5,530~5,560
만 배럴로 전망
 - 한편, OPEC의 생산량은 올해 리비아, 이라크 등의 생산차질로 인해 작년보다 하
루 77만 배럴 감소한 생산량을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IEA, EIA 등 주요 기관의 세계 석유 공급 전망에 따르면 내년 생산량은 금년대비
1.5% 증가한 하루 9,130만 배럴로 전망
 - 생산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2014년 세계 석유 수급은 하루 13
만 배럴 생산초과 현상이 나타날 전망

〈표 II-7〉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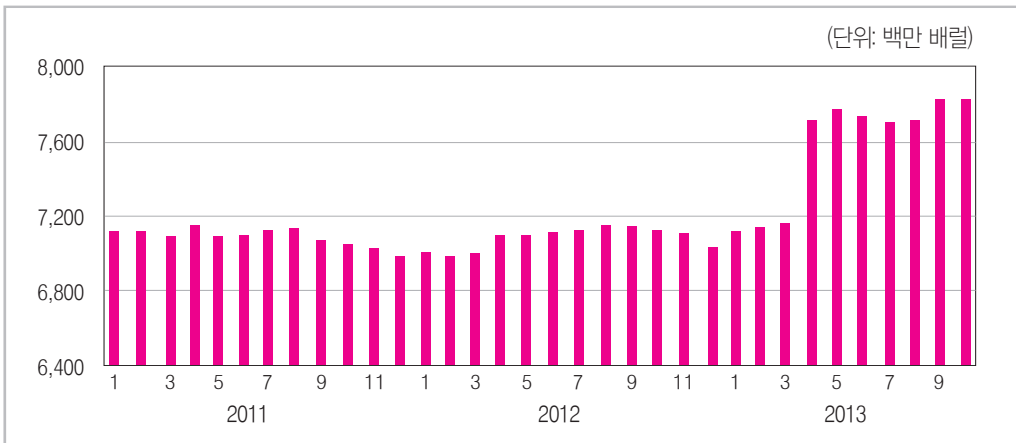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수요	89.29	90.26	90.73	90.97	92.04	91.97
非OPEC 공급	52.71	54.22	54.97	55.56	56.02	56.29
OPEC NGLs	5.75	5.83	6.05	6.11	6.16	6.22
OPEC 공급(원유)*	30.89	30.03	29.31	29.64	29.66	29.17
공급	89.35	90.07	90.33	91.31	91.85	91.68
재고변동	0.06	-0.19	-0.40	0.34	-0.19	-0.29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2013. 10월), 한국석유공사

- 또한, 전 세계 석유재고도 3분기 들어오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 증가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그림 II-20〉 세계 석유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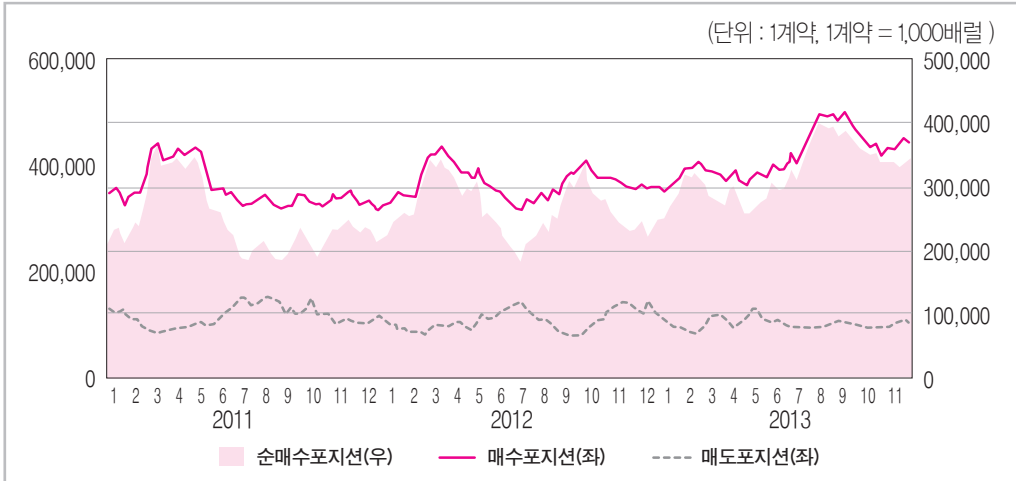


주: 2013년 4월부터 OMI의 재고물량 집계기준이 변경되어 임시저장-해상재고 물량이 통합되었으며 세계기타 물량의 산출 대상 범위가 Non-OECD 전 국가로 확대됨

자료: 한국석유공사

- (정치적 리스크) 절반의 성공인 이란 핵 협상 타결과 상승적인 MENA 지역 정정불안은 내년에도 생산차질을 빚을 가능성 존재
 - 11월 24일 이란의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의 핵 협상 타결은 당분간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를 진행하며 유가 하락에 기여할 것
 - 이란의 석유 생산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 조치로 2011년 12월 하루 358만 배럴에서 금년 중 260만 배럴로 감소, 사상 최저의 수출 기록
 - 그러나 6개월 뒤에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 의회의 부정적 기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 등을 해결해야 하므로 리스크 요인 잔존
 -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등에서의 정정불안은 201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상존
 - 리비아의 동서부 내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리아 종파 간 내전, 이집트 반정부 세력의 시위로 수에즈 운하 등 운송경로가 차단될 가능성
- (투기요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러화의 완만한 강세가 예상, 이는 유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하반기 들어서며 최근 3년 내 최고점을 넘어섰던 순매수 포지션이 내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양적완화 축소 개시 등으로 달러화가 소폭 강세 전망됨에 따라 청산되는 추세
 - 2013년 최고치 402,425(2013. 7. 23) 이후 344,662(2013. 11. 19)까지 하락

〈그림 II-21〉 NYMEX-WTI 선물옵션 투기 포지션



자료: 미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 (유가전망)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14년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하방 리스크 상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변경, 미국 등 非OPEC국의 석유 생산 증가 등으로 유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내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가 시작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오르며 원유 수요세를 견인하겠으나 공급량이 이를 능가하며 유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고용 및 실물경기 지표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가 행해지지 않는 시점이 존재할 가능성 있음.
 - 예상된 변수이기는 하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등 Fragile5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유가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표 II-8〉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유종	2012 평균	2013			2014				
			3Q	4Q	평균	1Q	2Q	3Q	4Q	평균
CGES (11.18)	Brent	112.40	111.70	107.70	109.00	106.90	105.50	103.50	100.30	104.00
CERA (11.7)	Dubai	109.08	106.30	104.51	104.95	102.02	100.65	99.33	98.67	100.17
EIA (11.13)	WTI	94.12	105.84	96.68	97.74	95.67	95.33	95.67	93.33	95.00
PIRA (11.26)	WTI	94.15	105.80	98.90	98.25	98.00	99.35	101.40	97.00	98.95

주: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CERA(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EIA(美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2) 주요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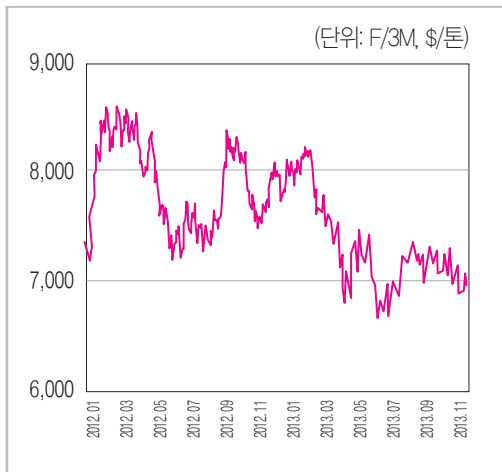
- (금) 美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보다 앞당겨 시행되며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금 가격은 주요국의 펀더멘탈 변동과 정책의 시행 이전까지 소폭의 박스권 등락을 지속할 전망
 - 12월 FOMC에서 전격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작이 발표됨에 따라 금 가격은 향후에도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할 전망
 - 다만, 유로지역, 일본, 혹은 중국발 펀더멘탈 쇼크가 있을 경우 가격 상승 가능
- (비철금속) 품목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내년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감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비철금속의 가격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알루미늄은 업체들의 지속적인 감산으로 내년 생산부족을 보이겠으나 사상 최대 수준인 LME 재고가 창고 규정 개정으로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돼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
 - 구리와 니켈은 모두 둔화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생산초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수익성이 떨어진 업체들의 공급 감산이 생산초과 폭을 줄일 전망
- 납과 주석은 중국의 배터리 관련 수요의 견조세로 내년에도 생산이 부족하며 가격이 상승할 전망
- (농산물) 공급의 확대와 美 에탄올 의무사용량 감축 가능성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해외의 곡물 수입 수요와 숯커버링 증가가 가격 하락폭을 제한할 전망
- 美 옥수수 생산량이 3.55억 톤(전년 대비 +29.8%)으로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대두 생산량도 8,866만 톤(전년 대비 +7.4%)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 겨울밀의 발아율도 93%로 과거 5년 평균(89%)를 크게 상회하는 등 곡물 생산 호조
- 美 환경보호국이 과도한 의무 사용량에 따른 업계 비판을 수용해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량을 당초 181.5억 갤런에서 150~155.2억 갤런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돼 곡물 가격 하락 예상
-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최대 소맥 수입국인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의 소맥 매수뿐 아니라 프랑스, 루마니아, 독일, 미국 등으로부터도 추가 구매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곡물 가격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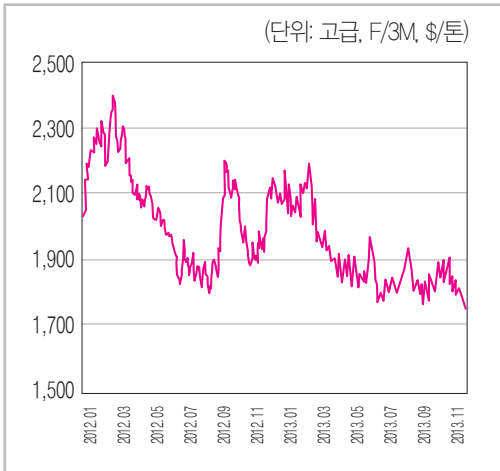
〈그림 II-22〉 금



〈그림 II-23〉 구리



〈그림 11-24〉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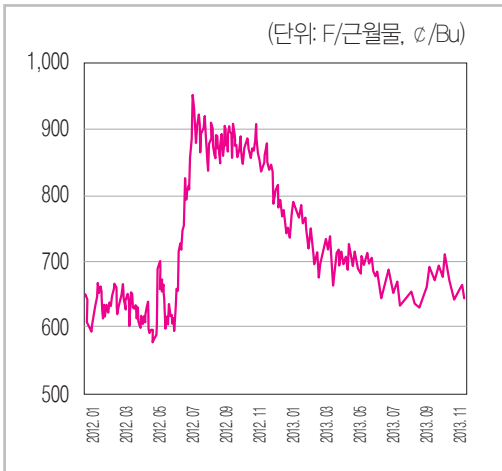
〈그림 11-25〉 니켈



〈그림 11-26〉 옥수수



〈그림 11-27〉 소맥



(3) 주요국 환율

- (주요국 환율) 2014년 주요국 환율은 점진적인 달러화 강세 속에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유로화, 엔화 약세 폭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

- (미달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고용시장과 민간소비의 회복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내년 시행됨에 따라 달러화는 박스권 등락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강세 기조를 보일 전망
 - 12월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전격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달러화는 점진적으로 강세를 시현할 전망
 - 고용시장, 주택시장, 민간 소비 등이 부진을 보일 경우 양적완화 축소를 철회하는 시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 이럴 경우 달러화는 소폭 하락 가능
 - 또 내년 초 예정되어 있는 부채한도증액 협상이 리스크 요인

- (유로) 유로 지역이 내년 비로소 경기 확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인 리스크의 산재와 미국과의 회복 폭 차이로 인해 유로화는 점진적 약세를 보일 전망
 - 구제금융을 종료하는 남유럽 위기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취약한 은행 부문 재정, 수지 악화, 높은 실업률 등의 하방 리스크가 산재한 데다 은행 동맹의 발전 등 유럽 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적인 관문이 존재해 유로화는 약세를 지속할 전망

- (일본엔)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비해 둔화되고 아베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이 내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지속, 내년 엔화는 올해보다 축소된 낙폭으로 엔저를 유지할 전망
 - 아베노믹스로 인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며 내년 일본의 경기회복 사이클이 미국의 회복과 차이를 벌릴 보일 것으로 보여 국채수익률 차이로 인해 엔화는 저평가를 지속할 전망
 - 한편,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에 도전하는 아베 정부는 인플레이션 유지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풀가동하며 엔저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아베 정부가 신뢰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 엔고 현상 시현 불가피

- (중국위안) 국제사회의 절상 압력과 내수 성장전략으로의 정책 변화로 내년 위안화는 완만하게 절상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기 회복 확대와 함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또한 내수로의 경제 성장 방안 변동 중의 경착륙 방어를 위해 절상 압력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 위안화는 아주 미세한 범위 내에서 절상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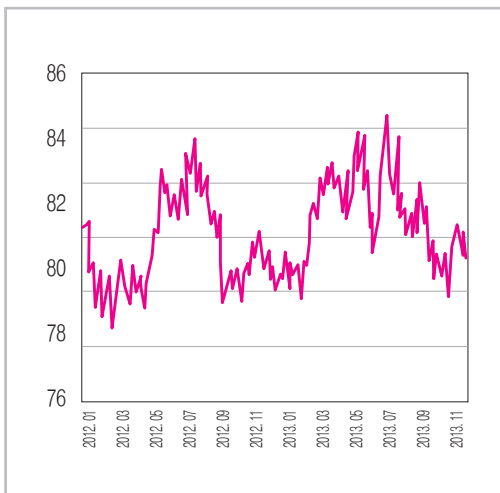
〈표 II-9〉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103.31	103.64	106.40	109.23
달러/유로	1,3223	1,3118	1,2780	1,2800
위안/달러	6.09	6.06	6.07	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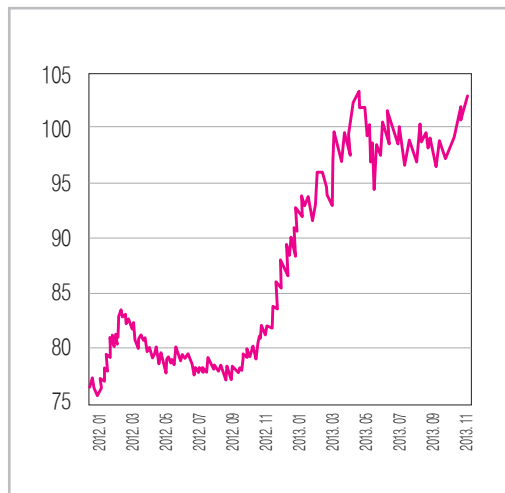
주: JP모건 외 14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값, 전망시점은 12/02~12/06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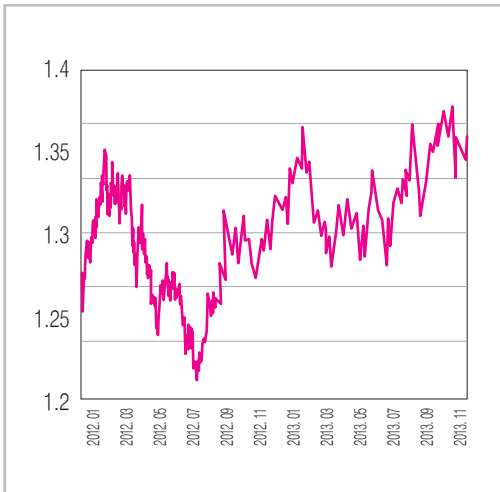
〈그림 II-28〉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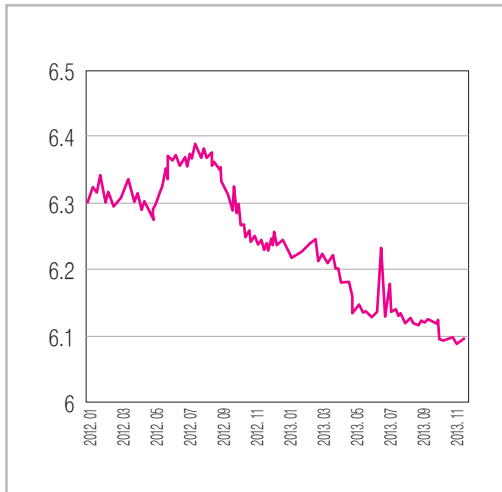
〈그림 II-29〉 엔/달러 환율



〈그림 II-30〉 달러/유로 환율



〈그림 II-31〉 위안/달러 환율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II-10〉 전망의 주요 전제

	2012년	2013년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	3.1%	2.9%	3.6%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09달러/배럴	104달러/배럴	100달러/배럴

2. 2014년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성장률 : 2013년 2.7% → 2014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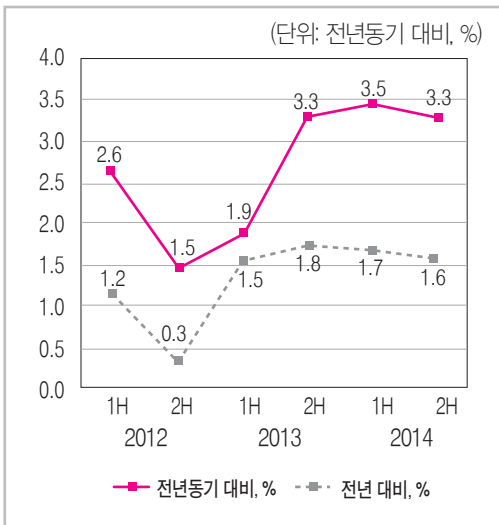
- 대외여건의 개선속도 미흡해 수출증가세는 5%대의 제한적 회복세
 - IMF,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 2.9%보다 0.7%p 높은 3.6%로 전망했지만 2000~2007년 평균 4.2% 수준에는 미달
 -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브라질, 印度 등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은 대규모 자본 유출 발생 등으로 점차 둔화될 전망
 - 또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변화시킬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회복(성장률 3.6%)에 대한 기대는 다소 낙관적일 가능성
 - ✓ 미국: QE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 및 경기회복지연, 부채한도 조정 및 Shut-down 관련 정치리스크
 - ✓ 유럽: 은행 자본확충미흡, 정부·민간 디레버리징, 고실업률 지속, 반EU 움직임 등
 - ✓ 중국: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 ✓ 일본: 소비세율 인상, 아베노믹스 관련 불확실성 지속
 - ✓ 인도 등 신흥국: 미국 QE 축소,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 지속 가능성
- 또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진입, 기업투자심리 위축 지속 등으로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음
 - 임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적인 디레버리징으로 진입하면서 소비회복을 지연시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¹⁾으로 작용
 - ✓ 또한 주택시장에서의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과정이 내년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소유 증산층과 임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소비심리 위축도 지속될 것임
 -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조치들과 복지확대 관련 증세 논란 등도 2014년 기업투자

1)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위축된 소비가 기업투자와 고용창출 기능을 약화

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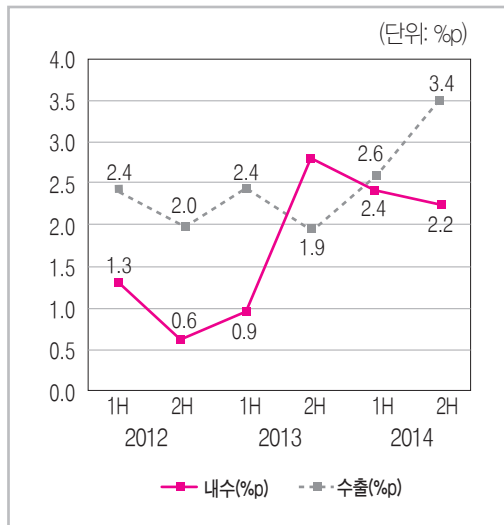
- 2014년 재정정책 여건도 경기부양 여력은 크지 않은 편
 - 2014년 총지출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 2014년 총지출은 358조 원, 2013년 추경 대비 2.5% 증가
- 2014년 성장흐름은 '상고하저'가 예상되고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해 성장이 주도될 것으로 보임
 - 증가율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전년동기 대비 및 전기 대비 증가율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 II-32〉 반기별 성장흐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3〉 내수 및 수출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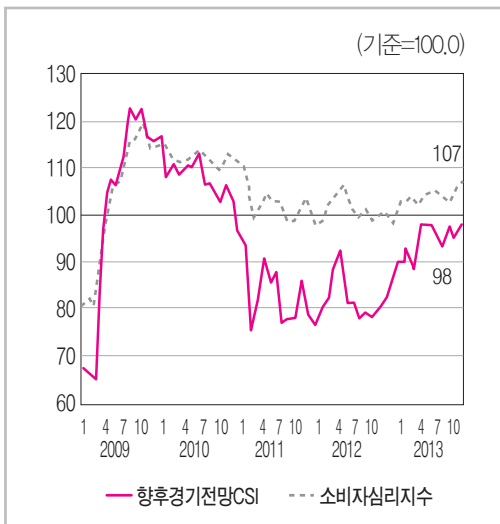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 : 2013년 1.9% → 2014년 2.6%

- 대내외 여건 개선, 물가안정세 지속 및 원/달러 환율하락 등 실질 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어 2013년에 비해 소폭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소비심리지수도 신정부 경제정책, 대외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상승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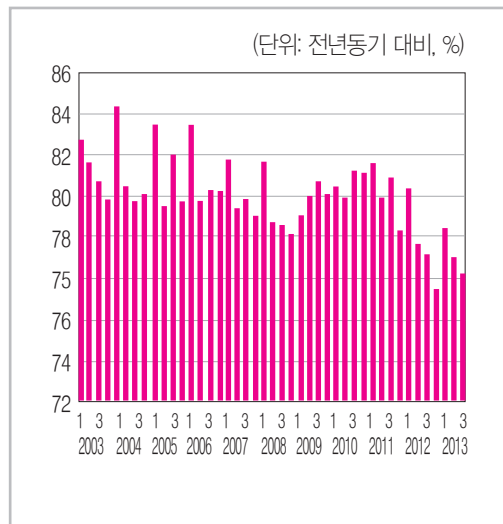
- 하지만 부채 디레버리징, 주택시장 회복 지연과 전세가격 상승 등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을 하회하는 2%대 중반의 증가율에 그칠 전망
 - 2013년 3분기 말 현재 약 992조 원의 가계부채(가계대출 938조 원, 판매신용 54조 원)에 대한 이자부담만 대략 연간 45.7조 원²⁾
 - 최근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있는 점은 가계부채 조정과정에 따른 구조적 소비 위축의 조짐일 가능성
 - ✓ 2003년 이후 평균 약 81%를 유지해오던 가계부문의 평균소비성향(=가계지출/소득)이 2012년 부터는 78% 이하로 약 2~3%p 하락
 -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전월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그림 II-34〉 소비심리지수(CSI)



자료: 통계청

〈그림 II-35〉 가계 평균소비성향



자료: 한국은행

2) 2013년 10월 말 잔액기준 가계대출금리 연 4.61%를 적용

■ 설비투자 : 2013년 -3.0% → 2014년 4.8%

-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수출회복,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반등 시도 예상
 - 2011년, 2012년, 2013년 연속 3년간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진데 따른 소위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 예상
 - ✓ 실제로 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13년 1분기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³⁾
 - 세계경제 개선으로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설비투자가 반등할 가능성⁴⁾
 - 향후 금리인상에 대비한 선투자, 원화강세 등에 따른 투자비용의 하락 등도 2014년 설비투자 회복에 긍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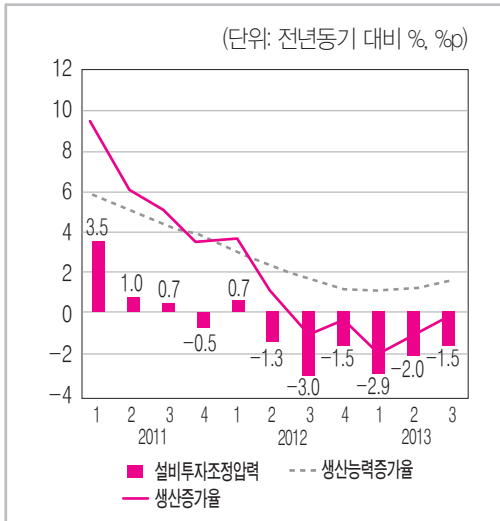
- 회복 속도는 약 5%의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 우선 대외여건 개선속도가 미흡한데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공격적 투자증가를 제약할 전망
 -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⁵⁾들이 기업투자심리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한은 기업실사지수(BSI)의 설비투자전망도 기준치(100) 이하를 지속하고 있는데 경기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

3) 설비투자조정압력(%p)은 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증가율(%)을 뺀 값인데, 그 값이 커질수록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높아짐을 의미.

4) 2001~2012년중 들어 설비투자와 실질 재화수출과의 상관계수는 0.64, 탄성치는 0.4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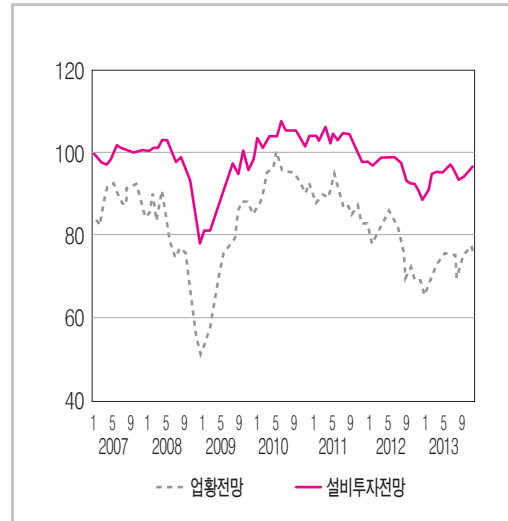
5) 환경·노동 규제(통상입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 등) 기업정책규제(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등 경제력집중 규제,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해 내부거래 규제 강화, 이종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국민연금의결권 적극 행사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납품단가협의를 권 등 중소기업 보호 정책 등

〈그림 II-36〉 설비투자압력



자료: 통계청

〈그림 II-37〉 BS(업황 및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 건설투자 : 2013년 6.5% → 2014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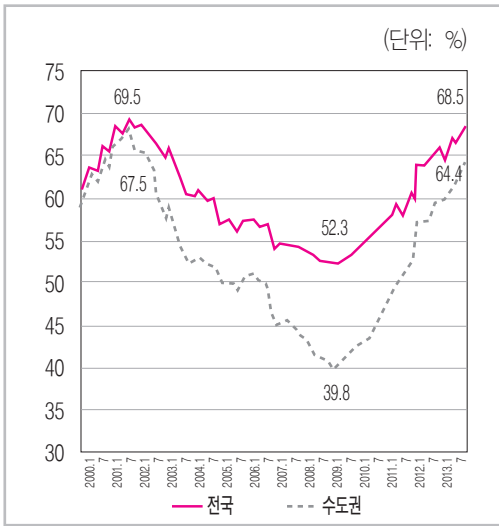
- 주택경기의 중장기적 구조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4년 SOC예산⁶⁾이 전년 대비 축소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3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고령화·저출산, 주택 주 수요층인 35~54세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약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주택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전세가 상승이 매매수요를 자극해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도권외의 경우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전고점인 2001년도의 최소 70%(전국 기준)에 이를 때까지는 매매가 하락 지속 불가피
 - 부채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보유주택에 대한 매도압력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도 어려워질 전망
 - 공급측면에서도 PF부실,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 등의 후유증이 이어지

6) SOC예산: 25.0조 원(2013년) → 23.3조 원(2014년)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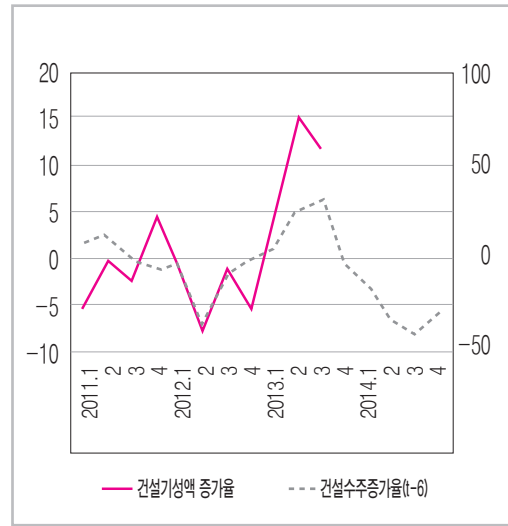
면서 건설투자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1-38〉 전세가/매매가 비율



〈그림 11-39〉 건설투자액 증가율



자료: 국민은행

(2) 수출입 및 경상수지

■ 수출증가율(BOP 기준) : 2013년 3.1% → 2014년 5.3%

- 미국 등 선진국의 점진적 경기개선 전망은 한국의 수출회복에 긍정적 요인이나, 美 출구전략 시행 및 이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불확실성,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엔화 약세 등은 부정적 요인도 만만치 않아 연간 약 5%대의 증가에 그칠 전망

- 중국(우리 수출의 약 25% 차지)의 내수중심 경제구조개혁 추진은 중간재 중심의 對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美 Fed의 출구전략으로 동남아경제의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경우 동남아 비중을 늘려온 한국 수출 전략에 리스크 요인이 될 전망
- ✓ 신흥시장국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 확대,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향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조치 시행에 따른 엔저가 우리 전자,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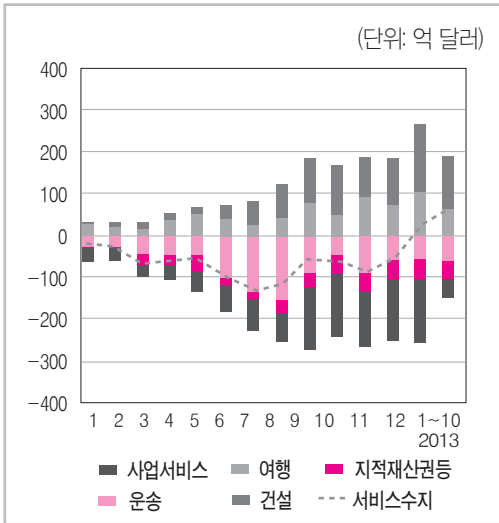
■수입증가율(BOP 기준): 2013년 -0.5% → 2014년 4.8%

- 2013년 대내외 수요부진으로 연간 -0%대의 정체수준을 보이겠으나 2014년에는 점진적인 대내외수요 회복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회복할 전망
 - 하지만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 전망, 낮은 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2014년에도 수입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일 전망

■경상수지: 2013년 691억 달러 흑자 → 2014년 633억 달러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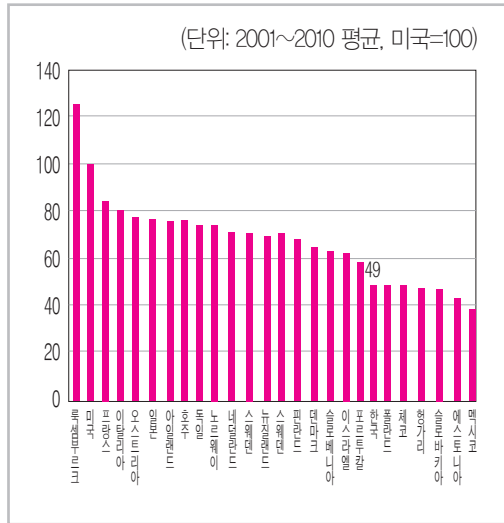
- 2013년 경상수지는 연간으로는 약 691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
 - 올 1~10월에만 589억 달러로 이미 사상 최대였던 2012년(481억 달러)을 초과
- 2014년에는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가 소폭 적자로 반전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줄어들 전망
 - 수입이 미흡한 내수회복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상품수지는 2014년에도 큰 폭의 흑자 지속
 - 서비스 수지는 외국관광객 급증, 건설서비스 흑자 등에 힘입어 2012~2013년 중 1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산업의 원천적인 저생산성 상황, 환율하락, 엔저 등을 감안할 때 적자추세로 회귀될 가능성
 -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의 영향으로 흑자 확대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이전소득수지는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 추세 지속

<그림 II-40>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1> 서비스산업 1인당 노동생산성



자료: OECD

(3) 물가

■ 소비자물가 : 2013년 1.2% → 2014년 2.2%

— 공기업 정상화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 등으로 물가 오름세는 점차 확대될 전망

- 정부는 세수 확보, 정부 부채 축소 등을 위해 자산매각, 사업규모 축소 등 강력한 자구책을 포함 전기와 가스, 수도, 도로, 철도 등 다섯 가지 공공요금을 해마다 물가상승률 수준인 2.5% 정도씩 올릴 방침

- ✓ 더구나 12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기업들은 1미만의 이자보상배율, 100% 미만의 원가보상율들을 감안할 때 필연적으로 공공요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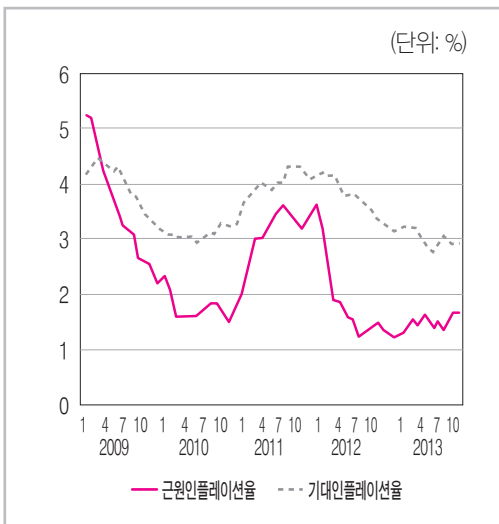
-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3% 부근에서 유지되고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회복이 물가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

- 또한 2012년, 2013년 시행된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물가지수 하락 효과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의 속성상 2014년 3월 이후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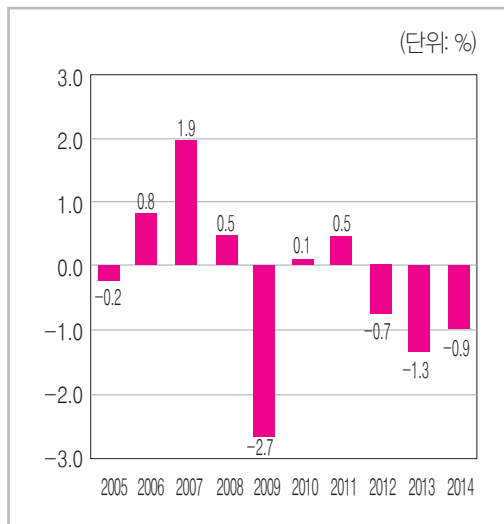
- 하지만 2014년 물가상승률 확대는 2%대 초반으로 제한될 전망
 - 국내물가 변동의 주요변수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의 하향안정세가 예상
 - 내년 성장세가 빠르지 않아 GDP갭률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일 전망(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도달하지 못해 수요가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

〈그림 II-42〉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3〉 GDP갭률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4)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3년 3.2% → 2014년 3.8%

- 美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상승⁷⁾ 등이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7) 일반적으로 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금리 변동의 주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유럽위기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반등 등으로 글로벌 금리상승 추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승(채권 가격 하락)할 전망
 - ✓ 미국의 출구전략의 점진적 시행과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한 충격 분산 등을 고려할 때 국내금리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기조를 이어갈 듯
 - ✓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확대되고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이 가중될 경우 국내금리 변동폭도 예상보다 확대 가능성
-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점증함에 따라 기준금리 정상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 기준금리가 2013년 5월 이후 12월까지 7개월간 동결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자금 유출입 문제도 작용했지만 불안정한 경기흐름과 1%대의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상반된 신호 때문
 - ✓ 하지만 내년중에는 물가상승, 안정적 회복흐름이라는 동조적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원/달러 : 2013년 1,098원 → 2014년 1,072원

- 6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 충분한 외환보유고, 높아진 국가신용등급 등은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여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 상승)요인으로 작용
 - 다만 양적완화 축소가 글로벌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제약
- (리스크 요인)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환율의 향방의 주요 변수
 -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폭의 자금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원/달러 환율의 완만한 하락 추세가 예상됨
 - 하지만 양적완화 시행으로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될 경우, 또는 일본의 양적완화가 엔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규모가 확대되면서 환율이 급등할 위험성 상존

〈표 II-11〉 2013~2014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0	1.9	3.3	2.6	3.5	3.3	3.4
(SA, 전기 대비, %)		1.5	1.8		1.7	1.6	
민간소비	1.7	1.6	2.1	1.9	2.9	2.3	2.6
건설투자	-2.2	5.2	7.7	6.5	1.5	2.2	1.9
설비투자	-1.9	-8.2	2.7	-3.0	4.9	4.6	4.8
수출(재화+서비스)	4.2	4.6	3.6	4.1	4.8	6.5	5.6
수입(재화+서비스)	2.5	3.2	3.2	3.2	4.3	5.8	5.0
소비자물가	2.2	1.3	1.1	1.2	1.7	2.7	2.2
경상수지(억 달러)	481	298	394	691	287	346	633
상품수지(억 달러)	398	252	343	595	293	362	655
수출(억 달러, BOP 기준)	5,542	2,797	2,916	5,713	2,941	3,076	6,018
증가율, %	0.4	1.6	4.6	3.1	5.2	5.5	5.3
수입(억 달러, BOP 기준)	5,144	2,545	2,573	5,118	2,648	2,715	5,363
증가율, %	-1.1	-2.9	2.0	-0.5	4.0	5.5	4.8
서비스 및 소득수지	83	46	50	96	-6	-16	-22
환율(원/달러, 평균)	1,127	1,103	1,092	1,098	1,066	1,078	1,072
회사채수익률(3년, AA-)	3.8	3.1	3.4	3.2	3.6	3.9	3.8
실업률(%)	3.2	3.4	3.0	3.2	3.2	3.0	3.1
취업자 증감(천 명)	437	290	409	349	347	329	338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제Ⅲ장

이슈분석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1. 검토 배경⁸⁾

- 장기침체뿐만 아니라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 등 임금체계상의 문제로 고용창출 유인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
- 최근 고용증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유인은 여전히 부족
 - 2008. 10~2013. 10 사이 공공행정(16.2만) 및 보건의료(71.3만) 등 정부지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 위주로 일자리 증대
 - 전체 취업자의 8.7%에 불과한 공공행정 및 보건의료부문이 전체 일자리 증가의 51.5%를 차지
 - 아직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유인이 회복된 것은 아님
- 임금과 성과, 생산성 간의 연계 부족, 생산성보다 빠른 임금 상승 등으로 고용창출 유인이 크게 위축된 결과
 -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호봉급 중심의 연공급이 지배적
 - 기본급 총액에서 호봉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이고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
 - ✓ 한국의 1년 미만 근속근로자 대비 30년 근속 근로자의 임금은 330.6%로 일본(283.5%), 독일(197.9%), 이탈리아(150.5%), 프랑스(134.5%)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음⁹⁾
 - 1인당 국민소득 감안시 제조업 시간당 임금은 OECD 및 주요 경쟁국(31개국) 중 12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13개국 중 3위
 - 일본, 대만은 2000년 이후 단위노동비용(시간당 명목임금/시간당 산출량)이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33% 상승¹⁰⁾

8) 변양규(2013), “임금체계 개편 방향”,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 현안 토론회』, 한국경제연구원, 2013. 11. 27

9) 한국노동연구원(2011), “임금의 연공성 국제비교”

10) 변양규(2013), “우리나라 생산요소 비용”, 『우리 경제 엑소더스, 원인과 대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전경련, 2013. 6. 26

- 이처럼 노동력 사용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비용 증대를 초래할 각종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 노동력 사용에 대해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법안들이 제안되었으나 대부분이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근로자 보호를 달성하려는 법안으로 노동사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부작용 우려
 - 예를 들어, 파견/기간제 근로 사용 사유 제한, 상시적 업무에 간접 고용 제한, 정년연장(2013. 4. 30. 국회 본회의 통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임금체계개편/임금조정에 대한 논의 없이 노동력사용에 대해 수량적 제한만 가하는 법안들이 국회 통과 또는 계류 중
 -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위해 임금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사용에 대한 제한만 논의되고 있음
-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의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점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현재 논의되는 법안 중 임금체계와 가장 관련이 큰 사항은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임
 -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관점에서 주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찾고자 함

2. 노동시장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정년 60세 법안 통과¹¹⁾

-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년연장 의무화 및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제19조 개정을 통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함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대해 의제규정을 신설하여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함
 - 쟁점이 되었던 ‘임금조정’의 필요성 명시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대체됨
 -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조정’ 도입을 명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임금삭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임금체계 개편’으로 수정됨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조정이 정년연장의 조건부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님
 - 정부 지원의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정년연장 의무화의 구속력을 높임
 - 정년을 연장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원안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11) 변양규(2013), “정년연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및 이지만(2013), “정년 60세 법안과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 현안 토론회』, 한국경제연구원, 2013. 11. 27. 참조

- 기업 규모 등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을 시행 시점으로 설정함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표 Ⅲ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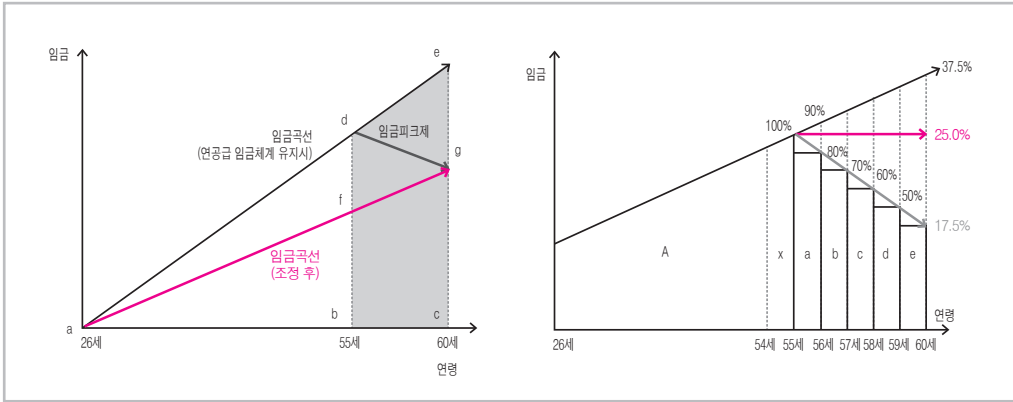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자료: 국회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년연장 법안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직급 장년 인력의 과다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령에 따른 생산성 곡선은 일정 연령에 이르면 하락¹²⁾하는 반면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
 - 연령에 따른 생산성 곡선은 전반적으로 40세 전후까지 상승하다가 40세 중반 이후 하락으로 전환
 - 생산성 하락 전환점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이 제조업보다 빠름
 - 1,000인 미만 기업은 전연령 일정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반면,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40대 중반까지 빠르게 증가한 이후 하락
 - 연령에 따른 임금 곡선은 20~30대에 빠르게 상승하다가 30대 후반부터 완만히 상승
 - 전문직과 사무직이 많은 금융업 및 공공부분에서 임금 연공성이 더욱 강함
-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증가 시 고직급/고연령 가속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짐
 - 정년 연장 시 임금 추가비용은 아래 그림 좌측의 □ bced에 해당
 -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 bcgd만큼의 노동비용 증가
- 인건비 총액 및 고직급 인력 총량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기업의 성장 및 수익률, 신규채용 및 전체 충원을 지난 3년 평균 수준으로 전제하고 55세 근로자 임금을 26세 신입사원 임금의 3배로 가정할 경우 인건비는 약 37.5% 증가
 -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인건비 증가는 17.5%에 달함
 -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 및 고직급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

12) 고용노동부 자료에 근거한 연령-생산성 곡선 추정. 어수봉(2013) 참조

〈그림 Ⅲ-1〉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와 임금피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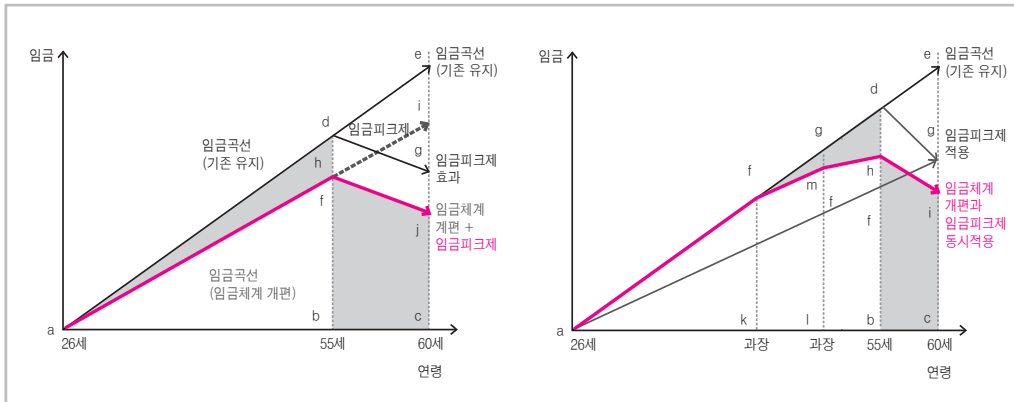


자료: 이지만(2013)

■ 정년 60세 법안 안착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이 필요
 - 임금피크제 실행과 함께 생산성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증대
 -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임금피크제를 고안해야 함
 - 또한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정년연장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즉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의 동시 실행이 필요

〈그림 Ⅲ-2〉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선의 효과



자료: 이지만(2013)

- 선 ahi 를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기업 총 인건비 부담 중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동의 필요
 -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행할 경우 임금곡선은 선 ahj 가 되고 인건비 부담 절감에 더 효과적이며, 전체 구성원에게 분담 효과도 발생
- 간부급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 시행 가능성이 높음
 - 임금체계 개편대상을 노동조합원이 아닌 간부(과장)부터 적용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행할 경우 임금곡선은 $afmhi$ 가 됨
 -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고, 간부급은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을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음
- 생산성에 연동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및 고직급 장년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정년 60세 시대에 적합한 임금체계로 변화 지원 정책이 필요
 -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연동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 직무급 또는 직능급의 혼합형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경직된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기여할 것임
- 고직급 장년 인력의 효과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고직급 장년 인력에게 적합한 인사관리체계 지원제도를 개발해야 함
 - 장년층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개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출향 및 전직 지원제도, 장년층의 점진적 은퇴 활성화를 위한 퇴직금 제도 개편을 고려해야 함
 - 정년 60세 시대에 적합한 인력관리시스템으로 최적 인력 총량 관리, 연령별 인력 분포, 직급별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함
 - 최적의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의 필요성, 고직급·무보직 근로자의 효과적 관리 방안 마련, 장년의 경험과 역량에 적합한 직무개발, 전략적 퇴직 관리 실행 등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2) 통상임금 범위 확대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엇갈린 판결로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결정
- 수당 및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그간 법원은 상이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러한 판결은 법리상·절차상의 문제점을 내포
 - 종전 대법원은 행정해석과 동일하게 상여금 등 1개월 이상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상으로 볼수 없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¹³⁾
 - 그러나 1996년 대법원은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정을 보이고¹⁴⁾ 이후 같은 취지의 판례가 누적¹⁵⁾
 - 과거 판례는 소정근로의 의미에 주목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보다는 정기성의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13) 대법원 1990.11.9선고 90다카6948판결; 대법원 1994.10.28선고 94다26615 판결 등.

14) 대법원 1996.2.9선고 94다카19501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

15) 자세한 과정은 조준모·이상희,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법문사, 2013, 142쪽 이하 참조.

- 이 때문에 처음부터 1임금산정기간내를 전제로 하는 소정근로의 파악은 소홀히 하고, 오히려 1임금산정기간내에 관계없이 정기성의 의미 파악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
 - 또한 확립된 법리를 변경할 경우 합의체를 거쳐야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3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판례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 사회적 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하기로 결정
-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로 함
- 대법원은 1임금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2013. 12. 18)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소정근로는 미리 약속한 근로이며 1임금산정기(예를 들어, 1주, 1개월)를 기준으로 결정
-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 임금이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정기성)될 경우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결
 - 또한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일률성)되고, 그 지급여부 및 액수가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고정성) 통상임금에 포함됨
 - 그 결과, 정기상여금은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통상임금 범위는 ‘1임금산정기’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는 오랜 노사 간 관행과는 다른 판결
 - 일부 수당 중 근로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약하거나 지급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임금산정기를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전망
-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00인 이상 기업의 부담 증가는 첫 해 약 11조 3,800억 원
 -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초과급여, 연차수당 등 직접 노동비용이 급증하고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료도 증가하여 전체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전국 50개 기업의 임금지급실태’ 자료에 의하면 총 증가분은 11조 3,800억 원
 - 1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하는 경총의 추정액은 13조 7,000억 원

〈표 Ⅲ-2〉 100인 이상 기업의 부담증가 추정액

(단위: 조 원)

근로자수	현재연봉	증가분	기업부담
100~300인	4,081만원	330만원(8.1%)	4조 6,500억원
300~1,000인	4,113만원	313만원(7.6%)	2조 9,000억원
1,000인 이상	5,490만원	395만원(7.2%)	3조 8,300억원

자료: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자료에 근거한 추정, 유경준(2013)

-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운수업의 부담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
 - 산업별 임금증가 부담액은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에 따라 차이
 - 제조업 및 운수업의 임금증가분이 12.0%로 제일 크고 보건사회복지 분야도 7.5%가 될 것으로 추정
 -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의 임금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또한 주요 산업별로 투자 및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각 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인건비를 부채충당금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계획을 수정하고 현금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추정됨

- 상공회의소 회장단 설문 결과, 76.5%가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우려
- 국내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역시 지체될 것으로 판단
- 또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이 위축될 전망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약 2만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됨

〈표 Ⅲ-3〉 통상임금소송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고용감소 효과

(단위: 명)

		자동차산업 전체	완성차사	인건부품사
수출감소 효과		13,095	7,036	6,059
수입증대 효과		2,171	714	1,458
투자감소 효과		8,170	3,052	5,120
총 효과	매년 감소 효과	15,266	7,750	7,516
	3년 임금채권 포함 효과	23,436	10,801	12,635

자료: 이상희(2013), 조준모·이상희(2013)

■ 그 외에도 근로자 간 양극화 심화,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전망

-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수혜가 집중되어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
 - 임금총액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의한 임금증가의 폭이 큼
 - 반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상승 효과가 거의 없음
 -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다만,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개편한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폭이 작을 것으로 추정

■ 영속적으로 기업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노사주체별 적극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부 주도의 기업생태계 복원력 강화가 필요

- 영속적 기업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 상호작용이 요구됨
 -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복잡한 임금체계와 통상임금소송이라는 돌발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

- 정책 리더로서의 행정부 주도의 기업생태계 복원력 강화가 필요
 - 대법원 판결 이후 고정상여금 소급적용과 관련된 노사 간 혼란이 가속화될 전망
 - 합리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과학적인 정책 검증 대신 무분별한 비토만 쏟아 내고 노사 간 대화 등 노사자치도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큼
 - 행정부의 적극적 조정기능은 이미 실기(失機)한 측면이 있으나 정책 리더로서의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필요
 - 정부에 의한 조정 가이드 라인 제공 등 기업생태계 복원력 강화가 필요
 - 정부의 기업생태계 복원 미션은 단기적으로 고정상여금 관련 소급 여부,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되어야 함
 - ✓ 당장의 소급적 충격 해소: 중앙노사차원의 대화 유도, 기업노사차원의 조정컨설팅 지원
 - ✓ 미래부담 완화: 노사 간 힘의 균형에 의한 현장 노사자치를 존중하고,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하락과 고용감소 등 후유증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 모델 제시 등 일관성 있는 기업생태계 복원 수단 마련

- 각 노사주체별 기업생태계 유지 및 발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기업: 임금의 기준과 성격에 따른 분명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로-보상 관계가 분명해지도록 임금체계를 설계
 - 노조: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직시하는 노력, 변화가 심한 저성장기 극복 위해 노사 간 지혜가 필요하며, 신뢰구축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임

-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함

- 그간 노사 합의로 각종 수당이 신설되면서 임금체계는 복잡해짐
 - 19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총액임금

- 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들이 늘어나게 됨
 - 특히,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대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인상하여 임금총액을 크게 인상하였지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기본급 인상률은 낮춤
 - 이는 기본급(통상임금)을 올릴 경우 이와 연계되는 4대 보험 등 각종 인건비 및 근로자 부담이 늘어나 노사가 상여금 및 수당 신설에 합의한 결과
 - 따라서 그간 노조 역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할 시점
 -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각종 수당의 체계를 단순화하여 장래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해야 함
 - 특히, 소정근로와 연계된 수당과 연계되지 않은 수당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함
 - 또한 상여금 체계도 소정근로 및 성과와 연동되도록 설계해야 함
-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성 증대를 유도해야 함
 - 통상임금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새로운 노동시장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다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큼
 - 노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근로의식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이 반드시 필요함

(3) 시간선택제 근로 확산

- 현실의 단시간 근로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시간제 일자리 정책방향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전략”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의 두 트랙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전략은 단시간 근로의 근로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야함
 - 현행법 규제와 달리 열악하고 저급한 고용형태로 운용되던 단시간 근로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시간제 일자리 공급이 증가함

- 또한 근로시간의 유연화 관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이란 진정한 의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
 - 유연한 형태의 근로시간을 개발하여 구직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반듯한 단시간 근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의 정의 및 대상범위·초과근로제한 방식 및 범위·시간비례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의 적용 영역 명시·통상근로자로의 전환 요건 설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시간 근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함

- 극단시간 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
 - 이들은 휴일·휴가제도, 퇴직금제도,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극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 단시간 근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초과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수당의 지급문제가 중요하며 그 제한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합의해 나가야 함
 -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사실상 통상근로자로 취업시키면서 각종 노동보호법의 보호 기준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시 차별금지원칙, 시간비례보호의 원칙이 각각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시간비례원칙과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원칙 간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이라고 판단됨
 - 근로시간 비례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아니한 조건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 분할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여 또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에 비

례하여 산정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것과 그 밖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서로 연계되어 규율될 필요가 있음

- 명실상부한 시간선택제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필요
 - 단시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통상근로자로 전환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명실상부한 시간선택제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음
 - 다만 구체적인 통상근로자 전환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장에 해당 일자리가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비어 있는 경우에 전환이나 연장이 가능할 것임
 - 또한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환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통상근로자 전환권을 요구하기 위한 일정 조건을 명시할 필요도 있음
 - 한편, 경영상 사유가 있거나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이해나 요구가 중복되는 경우 등 조정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 훈련기회를 보장해야 함
 - 교육 훈련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승진과 보직 변경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시간선택제 근로의 확대 및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함

- 일정 요건 하에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보장할 필요
 - 특정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 외국의 입법례
 - 일정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남용방지 및 인력 운영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에도 적절
 - 단축기간이 종료한 후에 다시 통상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

한 사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 근로자 모집 시 시간선택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새로운 고용을 촉진 및 확산하려면 처음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되, 향후 일정 조건하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채용분야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모집 시 시간선택제임을 고지하게 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함
 - 현행법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미비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될 필요

3. 정책적 시사점

■ 노동시장제도 개편에 앞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함

- 임금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소득 격차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
 - 2000~2009년 사이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었으나 중위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
 - 오히려 문제는 중위소득 대비 하위 10% 소득이 하락하였다는 점
 - 임금체계 개편은 저소득층 소득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 이분화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함
 - 대기업·정규직·有노조 중심의 지대추구 행위가 다른 집단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해야 함
 - 대기업·정규직·有노조의 과도한 고용보호, 생산성과 일치하지 않는 임금상승은 다른 집단의 고용가능성 및 고용안정성을 훼손함

- 임금직무체계 개편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일치시키는 성장 친화적이며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함
 - 성장친화적 노동시장, 합리적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보장, 생산성과 능력에 맞는 보상,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차이가 인정되는 여건 등을 확립해야 함
- 직무와 성과, 능력 및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구성이 필요
- 다양한 임금결정체계의 혼합형을 고려해야 함
 - ✓(미국) 직무 + 성과 + 역량 + 시장가치 혼합형
 - ✓(일본) 연공급 성격의 직능급 확대 시 고직급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무급 개념을 가미
 - 성장력 감소 및 고령인구 확대에 대비해 직능급과 직무급의 혼합형을 검토해야 함
- 복잡한 임금체계, 취업규칙 변경 법리 등 제도적 경직성을 극복해야 함
-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여 임금과 근로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함
 -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명확/단순화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용이하게 해야 함
 - 노동조합 동의 대신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구하거나,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은 허용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 조건의 유연화도 검토해야 함
- 개별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도 극복해야 함
- 임금체계 개편 시 임금 감소 우려 등을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극복해야 함
 - 임금조정과 고용안정성/고용연장 등을 맞교환하는 접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7년	5.1	7.2	21,632	5.1	5.4	4.2	9.3	1.4
2008년	2.3	2.9	19,161	1.3	4.3	-1.9	-1.0	-2.8
2009년	0.3	-1.5	17,041	0.0	5.6	-1.0	-9.8	3.4
2010년	6.2	14.8	20,562	4.1	3.0	7.0	25.0	-1.4
2011년	3.6	7.1	20,489	2.2	2.3	-2.1	3.8	-6.5
2006년 1/4	6.1	9.4		5.7	6.0	3.8	7.2	1.9
2/4	5.1	9.1		4.5	6.7	0.1	8.0	-4.2
3/4	5.0	8.7		4.3	6.0	4.0	12.0	-0.5
4/4	4.6	5.4		4.5	7.5	5.7	5.7	5.1
2007년 1/4	4.5	4.5		4.9	5.9	7.3	12.6	4.4
2/4	5.3	7.2		5.2	6.3	5.7	13.0	2.0
3/4	4.9	6.3		5.4	4.8	1.5	4.0	-0.2
4/4	5.7	10.2		4.7	4.7	3.1	8.0	0.4
2008년 1/4	5.5	8.9		4.5	3.6	-0.6	2.8	-2.5
2/4	4.4	8.3		2.7	4.3	0.6	2.0	-0.5
3/4	3.3	5.3		1.8	4.6	2.1	5.3	0.4
4/4	-3.3	-9.4		-3.6	4.7	-8.7	-13.3	-7.7
2009년 1/4	-4.2	-13.6		-4.7	7.8	-7.5	-21.9	1.6
2/4	-2.1	-7.1		-1.1	7.3	-3.0	-18.1	4.3
3/4	1.0	1.8		0.4	5.3	-1.0	-9.4	3.2
4/4	6.3	13.1		5.6	2.2	6.2	12.2	4.0
2010년 1/4	8.7	22.4		6.9	3.3	11.2	29.6	1.8
2/4	7.6	17.6		3.9	2.8	5.8	32.0	-4.7
3/4	4.5	9.5		3.9	2.4	5.6	26.3	-4.9
4/4	4.9	11.0		3.0	3.2	2.3	16.9	-5.2
2011년 1/4	4.2	10.0		2.9	1.4	-2.1	10.3	-11.0
2/4	3.5	7.5		3.0	1.9	0.7	7.7	-4.2
3/4	3.6	6.3		2.1	3.3	-1.5	1.2	-4.0
4/4	3.3	5.4		1.1	1.6	-1.8	-3.3	-2.1
2012년 1/4	2.8	4.1		1.6	4.9	3.7	8.6	1.5
2/4	2.3	2.6		1.1	3.6	-2.6	-3.5	-2.1
3/4	1.5	1.1		1.6	3.5	-2.5	-6.5	-0.2
4/4	1.5	1.3		2.8	3.5	-4.2	-5.1	-4.1
2013년 1/4	1.5	1.7		1.5	1.3	-3.8	-11.9	2.4
2/4	2.3	2.1		1.8	3.8	2.9	-4.6	7.2
3/4	3.3	3.9		2.1	3.1	5.9	1.5	8.6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		상품	경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2006년	3,254.6	14.4	3,093.8	18.4	314.3	140.8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371.3	217.7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1.7	32.0	2,012.2	1,257.5
2009년	3,635.3	-13.9	3,230.8	-25.8	378.7	327.9	2,699.9	1,167.6
2010년	4,663.8	28.3	4,252.1	31.6	400.8	293.9	2,915.7	1,138.9
2011년	5,565.1	19.3	5,243.7	23.3	321.0	276.6	3,064.0	1,153.3
2011년 1월	444.7	44.7	419.8	33.1	15.6	1.5	2,959.6	1,114.3
2월	384.7	16.4	364.0	17.3	15.3	11.3	2,976.7	1,127.9
3월	480.5	28.8	455.7	28.1	27.5	13.3	2,986.2	1,107.2
4월	485.4	23.5	441.9	24.4	33.3	12.8	3,072.0	1,072.3
5월	473.3	21.7	452.8	29.9	16.3	21.8	3,050.8	1,080.6
6월	467.4	11.1	448.2	27.1	27.0	20.3	3,044.8	1,078.1
7월	489.5	21.1	443.0	25.1	47.3	37.7	3,110.3	1,052.6
8월	457.9	25.5	453.8	28.7	3.7	2.9	3,121.9	1,071.7
9월	465.1	18.0	452.8	29.4	21.0	28.3	3,033.8	1,179.5
10월	466.1	7.6	427.1	15.4	35.5	41.3	3,109.8	1,104.5
11월	460.1	11.5	430.1	11.2	40.0	45.6	3,086.3	1,150.3
12월	477.4	8.2	454.9	13.6	27.0	28.1	3,064.0	1,153.3
2012년 1월	412.2	-7.3	434.8	3.6	-16.2	-9.7	3,113.4	1,125.0
2월	463.2	20.4	450.4	23.7	13.1	5.6	3,158.0	1,126.5
3월	473.4	-1.5	450.4	-1.2	29.3	29.7	3,159.5	1,137.8
4월	461.1	-5.0	439.8	-0.5	17.5	17.3	3,168.4	1,134.2
5월	469.2	-0.9	445.4	-1.6	17.2	35.7	3,108.7	1,177.8
6월	471.8	0.9	420.5	-6.2	50.5	58.8	3,123.8	1,153.8
7월	446.8	-8.7	419.5	-5.3	53.4	61.4	3,143.5	1,136.2
8월	430.5	-6.0	410.4	-9.6	25.1	25.0	3,168.8	1,134.6
9월	454.2	-2.3	425.2	-6.1	54.9	59.1	3,220.1	1,118.6
10월	471.5	1.1	434.2	1.7	51.7	57.8	3,234.6	1,094.1
11월	478.0	3.9	433.2	0.7	67.8	69.1	3,260.9	1,084.7
12월	448.8	-6.0	430.7	-5.3	19.2	21.4	3,269.7	1,071.1
2013년 1월	456.8	10.8	452.1	4.0	26.0	22.5	3,289.1	1,082.7
2월	423.5	-8.6	402.7	-10.5	25.6	27.1	3,273.9	1,085.4
3월	473.6	0.1	441.2	-2.1	41.6	49.3	3,274.1	1,112.1
4월	462.7	0.4	438.2	-0.3	35.9	39.7	3,288.0	1,108.1
5월	483.3	3.1	424.4	-4.6	72.7	86.4	3,280.9	1,128.3
6월	467.0	-1.0	407.1	-3.0	50.2	72.4	3,264.4	1,149.7
7월	458.9	2.7	433.0	3.1	56.7	67.7	3,297.1	1,113.6
8월	463.7	7.7	414.5	0.8	53.3	57.4	3,310.9	1,110.9
9월	446.7	-1.6	410.2	-3.6	56.7	65.4	3,369.2	1,075.6
10월	504.9	7.2	456.1	5.1	70.3	95.1	3,432.3	1,061.4
11월	479.2	0.2	431.1	-0.6	-	-	3,450.1	1,062.1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지율

구 분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7년	1.4	2.5	3.2	6.6	11.2	10.2	5.70	1,712.5
2008년	8.5	4.7	3.2	-0.4	14.3	11.9	7.02	1,529.5
2009년	-0.2	2.8	3.6	2.2	10.3	7.9	5.81	1,429.0
2010년	3.8	3.0	3.7	9.1	8.7	8.2	4.66	1,765.0
2011년	6.7	4.0	3.4	1.6	4.2	5.3	4.41	1,983.4
2012년	0.7	2.2	3.2	6.2	4.2	5.3	4.41	1,983.4
2011년 1월	6.8(1.5)	3.4(1.2)	3.8(3.6)	12.9	6.5	6.6	4.52	2,091.6
2월	7.4(2.3)	3.9(1.9)	4.5(4.0)	-11.2	5.0	5.2	4.72	2,002.9
3월	8.2(3.5)	4.1(2.3)	4.3(4.0)	6.3	4.3	4.7	4.54	2,002.7
4월	8.1(4.2)	3.8(2.4)	3.7(3.6)	-0.6	3.9	4.5	4.54	2,153.1
5월	7.5(4.5)	3.9(2.6)	3.2(3.3)	3.9	3.7	4.4	4.44	2,121.9
6월	7.2(4.3)	4.2(2.8)	3.3(3.3)	0.5	3.0	4.1	4.40	2,074.6
7월	7.0(4.4)	4.5(3.3)	3.3(3.3)	5.2	3.2	4.6	4.48	2,150.1
8월	6.9(4.5)	4.7(4.0)	3.0(3.1)	10.9	4.0	5.6	4.29	1,869.4
9월	6.3(4.6)	3.8(3.9)	3.0(3.2)	-9.3	4.2	5.7	4.24	1,791.0
10월	5.8(4.5)	3.6(3.7)	2.9(3.1)	7.5	4.4	6.1	4.29	1,825.9
11월	5.1(4.2)	4.2(3.8)	2.9(3.1)	-0.8	4.4	6.2	4.24	1,858.8
12월	4.3(4.3)	4.2(4.2)	3.0(3.1)	-0.8	4.4	6.2	4.24	1,863.2
2012년 1월	3.2(0.5)	3.4(0.5)	3.5(3.2)	20.3	4.8	6.5	4.24	1,891.0
2월	3.1(1.2)	3.1(0.9)	4.2(3.7)	3.3	5.3	7.2	4.25	2,003.2
3월	2.4(1.7)	2.6(0.8)	3.7(3.4)	6.7	5.7	8.7	4.36	2,023.4
4월	1.9(1.7)	2.5(0.8)	3.5(3.4)	7.1	5.5	8.6	4.25	1,995.9
5월	1.0(1.2)	2.5(1.0)	3.1(3.2)	5.3	5.5	8.4	4.01	1,886.4
6월	0.0(0.0)	2.2(0.9)	3.2(3.2)	5.9	5.9	8.5	3.87	1,848.6
7월	-0.6(-0.5)	1.5(0.7)	3.1(3.1)	0.1	6.0	8.4	3.60	1,826.8
8월	-0.1(0.1)	1.2(1.0)	3.0(3.1)	-2.4	5.7	7.8	3.40	1,918.9
9월	0.2(0.5)	2.0(1.7)	2.9(3.1)	16.6	5.2	7.6	3.31	1,961.3
10월	-0.5(-0.3)	2.1(1.6)	2.8(3.0)	1.9	4.6	7.1	3.30	1,942.2
11월	-0.9(-1.0)	1.6(1.2)	2.8(3.0)	4.7	4.4	7.1	3.32	1,904.7
12월	-1.2(-1.2)	1.4(1.4)	2.9(3.0)	4.7	4.5	7.3	3.30	1,973.8
2013년 1월	-1.6(0.2)	1.5(0.6)	3.4(3.2)	-5.9	4.8	7.7	3.20	1,986.1
2월	-1.6(0.9)	1.4(0.8)	4.0(3.5)	23.0	5.3	8.1	3.06	1,979.9
3월	-2.4(0.5)	1.3(0.7)	3.5(3.2)	4.7	5.0	6.8	2.95	1,990.0
4월	-2.8(0.1)	1.2(0.6)	3.2(3.1)	3.6	5.1	6.9	2.91	1,938.9
5월	-2.6(-0.2)	1.0(0.6)	3.0(3.2)	4.7	4.8	6.8	2.96	1,974.5
6월	-1.4(-0.2)	1.0(0.5)	3.1(3.2)	4.7	4.9	6.6	3.24	1,884.4
7월	-1.0(-0.2)	1.4(0.7)	3.1(3.2)	5.3	4.6	6.5	3.38	1,871.8
8월	-1.3(0.0)	1.3(0.9)	3.0(3.1)	6.1	3.8	6.2	3.33	1,897.0
9월	-1.8(-0.1)	0.8(1.1)	2.7(3.0)	-	4.5	6.8	3.29	1,984.4
10월	-1.4(-0.4)	0.7(0.8)	2.8(3.0)	-	4.9	6.9	3.25	2,029.7
11월	-0.9(-0.6)	0.7(0.8)	-	-	-	-	3.37	2,009.9

주: 2)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감율, 3) 평잔 기준

산업활동

구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평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전년동기대비(%)	
								공공	민간
2006년	8.4	80.0	4.0	17.4	9.2	9.0	2.6	0.6	4.0
2007년	6.9	80.1	5.2	20.6	8.2	23.6	6.6	8.4	4.6
2008년	3.4	77.6	1.1	-14.1	-2.3	-7.6	4.9	6.5	2.2
2009년	-0.1	74.4	2.7	-10.4	-9.4	5.0	3.2	21.2	-5.8
2010년	16.3	80.9	6.7	8.3	25.1	-17.7	2.7	8.5	0.5
2011년	6.9	79.9	4.3	11.0	0.5	4.0	-0.9	1.2	-3.3
2011년 4월	6.8	79.4	5.2	9.0	2.2	0.1	-4.0	3.8	-10.7
5월	8.3	79.9	6.1	-0.8	11.7	-21.0	-4.0	-0.8	-6.9
6월	6.4	80.5	5.8	21.4	3.5	14.1	4.7	3.3	0.7
7월	3.7	79.9	5.5	-1.7	-3.0	-32.8	-8.9	-9.7	-8.3
8월	4.8	79.8	5.6	6.8	-2.9	72.8	-3.4	2.2	-7.1
9월	7.4	79.0	2.9	6.1	-3.2	-3.9	5.3	9.2	1.3
10월	6.6	78.8	2.4	18.0	-10.9	61.4	8.8	3.9	12.4
11월	5.7	78.4	1.2	33.9	-2.8	14.1	-0.9	-0.1	-2.3
12월	2.9	76.9	2.0	-9.6	-1.0	15.0	7.1	3.4	10.4
2012년 1월	-2.1	80.5	0.8	0.1	4.9	42.8	-5.0	-10.2	-2.7
2월	14.4	81.0	5.4	21.8	24.4	100.4	13.9	17.3	12.4
3월	0.6	78.1	0.1	-25.1	1.3	-3.5	-4.1	2.6	-8.0
4월	0.0	79.2	0.3	-6.9	5.1	-4.4	-4.8	-4.2	-4.0
5월	2.9	79.3	2.2	-10.9	-1.3	2.9	-3.9	0.2	-5.3
6월	1.6	78.1	0.6	-33.3	-4.5	2.6	-14.3	-12.7	-13.1
7월	0.2	77.0	2.7	-6.8	1.3	23.8	1.5	-4.5	3.4
8월	0.2	73.7	-0.4	-12.8	-14.4	-29.9	-7.9	-9.3	-5.1
9월	0.7	75.2	2.3	-7.5	-8.1	-14.8	-5.2	-2.1	-1.8
10월	-0.8	75.9	2.0	-18.1	-0.7	-22.7	-11.5	-14.0	-6.7
11월	1.9	78.0	4.0	42.2	-10.8	-20.0	2.2	-6.2	10.5
12월	-0.5	78.4	2.0	49.0	-6.3	-43.0	-7.9	-8.8	-6.2
2013년 1월	8.0	78.6	-2.7	48.4	-15.7	-52.7	9.0	-2.0	18.3
2월	-9.8	77.2	1.6	-54.3	-22.5	-47.0	4.0	-0.7	8.3
3월	-3.0	75.5	1.8	-0.3	-8.1	-20.7	3.4	-11.7	16.6
4월	1.8	75.9	2.0	16.3	-12.4	-18.5	18.4	7.4	27.1
5월	-1.4	75.4	0.6	16.3	-12.1	-18.4	12.7	44.8	-30.1
6월	-2.6	75.4	0.8	10.5	-6.1	-40.4	15.1	-28.5	-43.5
7월	0.8	74.2	1.0	3.8	-8.3	-14.6	13.5	-38.4	-0.1
8월	3.2	76.5	2.5	13.1	4.2	-8.4	17.0	11.3	22.9
9월	-4.0	73.4	-1.2	-3.1	-9.1	-3.6	5.6	-1.0	11.6
10월	3.0	75.6	1.6	74.4	14.2	47.1	5.6	15.1	18.5
11월	-	-	-	-	-	-	-	-	-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 1쇄 인쇄 / 2013년 12월 26일

1판 1쇄 발행 / 2013년 12월 28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최병일

편집인 / 최병일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48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48

keri 한국경제연구원

150-70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 (대표)3771-0001 (직통)3771-0048 팩스 : 785-0270~1

www.keri.org



값 7,000원